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창립 및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18일(토)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8호

“건강연구의 경계넘음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Tel_02-747-6887 Fax_02-3672-6887

E-mail healthcommune@gmail.com homepage : www.hcommune.org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창립 및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18일(토)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8호

“건강연구의 경계넘음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창립 토론회 발제문

□ 순서

□ 제안 1 "초국적기업과 식품안전"

-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제안 2 "과학기술, 생명공학과 건강"

- 김병수(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 제안 3 "에너지/기후변화와 건강"

- 이유진(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 제안 4 "노동안전보건을 매개로 한 적록동맹의 가능성"

- 한재각(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

□ 제안 5 "여성과 건강"

-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운영위원)

□ 제안 6 "세계화와 건강"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과 식품안전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식품안전 문제는 WTO와 FTA로 대변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Trans-national Agri-food Complex)의 횡포 및 공기업 사유화(Privatization) 등으로 인해 그 위험과 공포가 점점 더 증폭하고 있다. 식품안전 문제는 생태, 환경, 소비자, 농민, 농업, 지역사회, 보건의료, 건강, 과학, 식량위기, 기아 및 빈곤의 문제와 총체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최근 중국의 '멜라민(Melamine) 분유'에 대한 논란이 과자, 커피 등 가공식품 전체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확산된 것이 그러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멜라민 사태는 기업세계화와 과학적 검사방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과학적 근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일부 시험기관들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우유 속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값비싼 단백질 농도 측정법 대신 값싼 질소 함량 측정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축산 농가들은 고질소화물인 멜라민과 시아누릭산(cyanuric acid)을 사료나 우유 등의 제품에 첨가함으로써 질소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해 왔다.

멜라민 분유는 고급분유로 둔갑하였지만 이를 섭취한 영유아들은 심각한 신장 및 요로 장애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다. 멜라민이나 시아누릭산은 단일 화학물질 그 자체로는 강력한 독성물질이 아니다. (멜라민의 LD50(구강, 쥐)=3,000ppm)

그러나 미량의 멜라민과 유사체인 시아누릭산을 섭취했을 경우에 멜라민 시아누레이트(melamine cyanurate)를 형성하게 된다. 바로 이 물질이 신장을 통해 결정 형태로 배설되거나 신장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신장 및 요로결석과 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농축된 멜라민 결정은 소변 내 옥살산칼슘 및 요산과 결합하여 쉽게 결석을 만들며, 멜라민 결정은 신장의 원위세관과 집합관에 침착돼 세관의 손상을 유발하여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의 멜라민 사태의 배후에는 쑤루(三鹿)그룹과 중국 정부의 정경유착이 있다. 쑤루그룹은 시장점유율을 높여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해 CCTV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 아울러 쑤루그룹은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뇌물로 구워삶았다. 그 결과 쑤루그룹은 업계 1위가 될 수 있었다. 쑤루그룹이 수출한 농축산 식품 및 원료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키워 중국 내 중소기업의 축산농가가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빈곤이나 기아 문제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문제 또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세계 인구 중 거의 8억 명 가량이 일상적으로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5세 이하의 어린이 34,000명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1년에 1200만 명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 굶주려서 죽는 사람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인도의 경우, 2억 명의 인도 국민들이 굶주리는데도 1995년 밀과 밀가루 6억 2500\$, 쌀 13억\$(500만)을 수출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2억 1300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계속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로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국의 경우도 어린이 중에서 8.5%가 굶주리고 있으며, 20.1%는 굶주림의 위협에 처해있다. 따라서 부의 재분배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식품안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은 식량주권 또는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곡물가격과 유가 폭등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카길, 아처다니엘스미들랜드(ADM), 콘아그라(Peavey), 루이 드레뤼스(LDC), 병기(Bunge) 등 5대 곡물 메이저 기업들의 이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4월 30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농식품 거대기업인 카길은 2007년 12월~2008년 2월 중 10억 3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순이익이 86%나 증가했다. 아처다니엘스미들랜드(ADM)도 1~3월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3억 6,300만 달러보다 42% 늘어난 5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밀, 옥수수, 콩 등을 저장 운반하는 자회사의 순이익은 7배나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2,100만 달러에서 3억 4,100만 달러로 16배나 증가했다.

한편 몬산토사도 지난 2월까지 3개월간의 순수입이 11억 2,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5억 4,300만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이익도 14억 4,000만 달러에서

22억2,000만 달러로 치솟았다. 세계 최대 비료 제조사인 모자이크 컴퍼니(카길은 Mosaic Company의 지분 2/3를 소유하고 있다)의 경우도 비료 수요 폭증으로 수입이 같은 기간 4220만 달러에서 5억2080만 달러로 12배나 증가했다.

카길, 몬산토 등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은 WTO와 FTA를 통해 위생검역 조치, 관세 장벽 등을 허물어 자신들의 상품 판매망을 넓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종자, 농약, 약품 등에 대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독점 이윤을 최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농식품의 세계화가 심화되어 갈수록 광우병, GMO,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멜라민 등으로 인한 위험의 세계화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점점 긴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을 통해 한국의 진보운동이 식품안전 운동을 벌이기 위해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여 운동 전략과 의제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의 창립을 통하여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기업세계화를 감시하는 구체적인 운동이 현실 속에서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식품안전 : 농업, 농촌, 농민, 식품, 생태, 환경, 건강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식품안전은 농업, 농촌, 농민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6년 말 현재 국내의 농가인구는 330만 4천명(전체인구의 6.7%)¹⁾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농가인구 중에서 농림업취업자는 178만 5천명(농가인구의 54%)이다.

그러나 농업을 농가인구 또는 농림업취업자의 수나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계산하거나 단순히 토지, 농약, 비료, 농기계, 사료, 동물용 약품 등을 투입하여 곡류(쌀, 보리, 밀, 옥수수), 서류(감자, 고구마), 두류, 과실류, 엽채류,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류를 산출해내는 산업으로만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농업은 식량안보, 식량주권, 지역사회, 환경, 생태,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

1)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7』, 2007

로 보호해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농산물은 공급과 가격의 불안정성,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경쟁적 시장구조, 요소 및 자산의 고정성이 있다.

②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때문이다. 식량주권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²⁾를 말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을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 건강과 문화적으로도 적합하게 생산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³⁾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영양상의 필요와 식품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료에 언제든지 물리적 및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⁴⁾를 말한다. 식량안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 보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농업생산력, 식량의 원활한 유통과 무역, 구매력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또는 비교역적 기능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곡물수출 규제사례(2008.3)⁵⁾

국가	종류	조치 내용	적용 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4/30
	곡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2/18~08/4/3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57 품목)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2) GATT 제21조, WTO 농업협정 제20조 c항, 농업농촌기본법 제2장 제6조

3) 「Declaration of the Forum for Food Sovereignty」, Nyéléni 2007, 27 February 2007

4) FAO의 정의.

5)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년 2월호

인도	밀, 밀 제품	수출금지	07/2/9~(무기한)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밀	민간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	07/10월 상순~
	밀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2008/2/25~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4~08/3/5
브라질	밀	1백만 톤까지 관세	08/2/6 공포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
EU	곡물(일부 제외)	관세 철폐	08/1/11~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포

식량주권 또는 식량안보에 있어 최근 애그플레이션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자 주요 곡물 수출국이 자국의 농식품 및 사료가격 상승 억제 등을 목적으로 곡물 수출을 규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곡물 수출 규제는 공급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 시장가격을 더욱 왜곡하는 가격 폭등을 일으키게 된다. 아울러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더욱 탐욕스럽게 이윤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농식품의 무역자유화라는 담론은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과 대규모 농식품 수출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다.

③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즉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또는 환경·생태적 기능 때문이다.

구분	기능
OECD	1. 경관(Landscape) 2. 종·생태계 다양성(Species and ecosystem diversity) 3. 토양의 질(Soil quality) 4. 수질(Water quality) 5. 대기의 질(Air quality) 6. 물이용(Water Use) 7. 경지보전(Land conservation) 8. 온실효과 (Green-house gases) 9. 농촌활력화(Rural viability) 10. 식량안보(Food security) 11.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12. 동물복지(Animal welfare)

FAO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	1. 도시화 완화(Mitigation of Urbanization) 2. 농촌공동체 활력(Viability of rural community) 3. 피난처 기능(Sheltering function)
	문화적 기능 (Cultural function)	4. 전통문화 계승(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identity, values and tradition) 5. 경관제공(Offering beautiful rural landscape)
	환경적 기능 (Environmental function)	6. 홍수방지(Preventing flood) 7. 수자원 함양(Retention of water) 8. 토양보전(Soil conservation) 9.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식량안보 기능 (Food security function)	10. 국내 식량공급(Supplying domestic foods) 11. 국가 전략적 요청(National strategic needs)
	경제적 기능 (Economic function)	12.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Balanced development and growth of communities) 13. 경제위기 완화(Buffer of economic crisis)
한국	식량안보 기능	1. 식량안보(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보장)
	환경적 기능	2. 홍수조절 효과 3. 수자원 함양 효과 4. 토지유실 경감 효과 5. 대기정화 효과 6. 폐기물 처리
	농촌경관과 사회·문화보전 기능	7. 자연경관유지 및 생태계 보전 기능 8. 사회·문화적 순기능
	농촌의 활력유지 기능	9. 도시화 완화 10. 공동체의 균형 발전과 성장

④ 건강 및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농업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업이 파괴될 경우,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에 의해 식량의 집적과 집중을 통한 원거리 이동이 일상화된다.

그리고 원거리 이동 시 병해충이나 곰팡이 등에 의한 농식품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 후 농약, 살충제, 방부제를 사용함으로써 식품안전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된다.

농업이 유지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농업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식품안전의 질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주 중요하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다. 한국은 1990년~2003년 동안 연평균 12.8kg/ha의 농약을 사용했으며, 전 세계 146개국 가운데 대만,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2.3kg/ha의 농약을 사용했을 뿐이다. 현재 한국의 농업은 미국보다 5.6배나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1년 동안 국내의 축·수산물 생산에 투입된 항생제 사용량은 1,500만 톤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축수산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약 1kg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항생제 사용량은 1톤 당 31g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스웨덴보다 32배, 43.7g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덴마크 보다 22.8배, 145.6g의 항생제를 투입하는 미국 보다 6.86배, 356g의 항생제가 들어가는 일본 보다 2.8배 더 많다

⑤ 지역사회 유지 및 균형발전, 경관보호를 위해 농업이 유지되어야 한다. 농업은 지역의 노동력 흡수와 지역 경제를 유지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충해주고 있다. 농경지 1,000ha 당 부양 인구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3,182명으로 영국(3,396명), 미국(616명), 캐나다(401명), 호주(38명)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다. 국내의 농업인구 100명 당 부양인구수는 1970년 224명에서 1997년 1,019명으로 4.5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지역 공동화가 그만큼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의 침체는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고, 동시에 노동력의 고령화 및 질적 저하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저하, 농업소득의 감소 등 악순환을 야기한다.

현재 한국은 2007년 10월말 기준 전체인구 49,194,085명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8.6%인 23,903,785명에 이를 정도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이 몰락할 경우 지방의 지역사회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이고, 지방자치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은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전국이 부동산 개발 열풍에 휩싸여 녹색 농업경관은 사라지고 말 것이

다.

한편 녹색혁명, 과학농업으로 대표되는 관행 농업은 ①고투입식 농업방식의 확산으로 인한 비료와 농약 투입량 증가, ②항생제, 살충제, 호르몬제 사용,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 ③농장동물의 메탄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촉진, ④농장동물 사육과 하우스 재배 등에 석유 및 물 사용으로 인한 자원 고갈, ⑤농작업의 기계화 촉진에 따른 석유 사용 증가 및 생태계 균형 파괴 등의 역기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은 공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파괴나 농업자체의 붕괴로 인한 환경파괴에 비교하면 오히려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2. 누가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20억 톤의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교역에 사용되는 물량은 생산량의 13%인 2.5억 톤에 불과하다. 게다가 옥수수(35.1%), 밀(30%), 쌀(20.5%) 등 3대 곡물이 전체 곡물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곡물 교역량의 90%(옥수수 33.9%, 밀 44.3%, 쌀 11.7%)를 점유하고 있다.⁶⁾ 전 세계 밀 수출량의 73%, 옥수수 93%, 쌀 82%를 각각 상위 5개 수출국이 점유하고 있다.

밀, 옥수수, 쌀의 세계 상위 5개 수출국

품목	상위 5개 수출국
밀	미국(26.4), 캐나다(14.5), 호주(11.9), EU-27(11.4), 아르헨티나(9.2)
옥수수	미국(62.6), 아르헨티나(15.4), 브라질(6.9), 중국(5.8), 우크라이나(2.0)
쌀	태국(29.6), 베트남(16.2), 인도네시아(14.6), 미국(11.6), 파키스탄(9.5)

6) 전찬익·허용준, 「왜 선진국은 곡물 수출국인가?」, 「곡물과동과 식량위기」, 한국농업정책학회 2008년 제1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4.18

그런데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들이 바로 이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 5대 곡물메이저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하며, 유통 분야 시장점유율도 총 저장 능력의 75%, 수출취급능력의 56%, 밀 제분의 69% 등을 차지한다.

세계 5대 곡물 수출국과 수입국(2002~2007 평균)⁷⁾

(단위 : 백만 톤, %)

순위	수출국			수입국		
	국명	수출량	비중	국명	수입량	비중
1	미국	91.35	36.6	일본	26.00	10.8
2	아르헨티나	24.56	9.8	EU-27	15.20	6.3
3	캐나다	19.87	8.0	멕시코	14.22	5.9
4	호주	17.69	7.1	한국	12.48	5.2
5	EU-27	17.43	7.0	이집트	12.23	5.1
	계	170.9	68.5	계	80.13	33.3

미국(125.8%), 캐나다(136%), EU(프랑스 178.7%, 독일 121%, 덴마크 112.7% 등)의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곡물자급률이 100%가 넘는다. 따라서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을 통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WTO와 FTA를 통해 농산물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세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농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며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 2008년 7월 30일 DDA 협상이 결렬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미국-EU 같은 농산물 수출국들이 지급하고 있는 농업부분 보조금 때문이다. 브라질, 인도, 중국 등 농산물 수출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농업부분 보조금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EU 등은 보조금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5년간(2002~2006) 농가에 지급한 농업 보조금(직접지불금)은 연평균 164억 달러로 농업소득의 26%에 달한다. 농업 생산액 대비 농업 보조금 지원(2005년)은 미국이 14.6%, EU 22.3%에 달한다.(한국 5.0%) 결국 미국-EU 등은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세계 식량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 혜택은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이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USDA-FAS, PSD Online <http://www.fas.usda.gov>

곡물 수출물량 기준 상위 10개 수출국⁸⁾

순위	2000년			2006년		
	수출국	물량(톤)	점유율(%)	수출국	물량(톤)	점유율
1	중국	6,455,538	50.2	미국	6,979,635	55.0
2	미국	3,748,845	29.1	중국	2,493,152	19.6
3	호주	1,355,254	10.5	호주	1,175,671	9.3
4	독일	384,612	3.0	브라질	869,159	6.9
5	캐나다	314,954	2.4	캐나다	652,852	5.1
6	영국	224,220	1.7	우크라이나	356,964	2.8
7	우크라이나	168,912	1.3	태국	42,724	0.3
8	아르헨티나	87,573	0.7	불가리아	27,646	0.2
9	태국	40,030	0.3	파라과이	23,799	0.2
10	네덜란드	35,173	0.3	아르헨티나	23,391	0.2

한국은 세계 4위의 식량수입국이다. 한국의 사료가공용 곡물 수입량 중 다국적 곡물 기업에서의 수입량은 725만 톤으로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특히 옥수수는 카길(콘티넨탈 그레인 포함)이 50%를 공급한다.⁹⁾ 현재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쌀, 콩(대두)과 같은 주요 곡물을 국영무역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국영무역 이외의 곡물은 종류에 따라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사료협회와 같은 생산자 협회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현물구매를 하지만 실제로는 카길 등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량안보, 식량주권,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실 속의 기업 집중 현상 심화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미국의 상위 10대 육류가공업체¹⁰⁾

(매출액 기준, 단위: 100만달러)

8) 농수산물유통공사 통계자료(김병률·이명기, 「국제 곡물가격 상승 전망과 국내 농업 파급영향」, 「국제곡물가격 상승 영향과 대응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12.4, p23 재인용)
 9)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한울, 2008, p136
 10)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윤병선, 「한미 FTA에 숨어 있는 괴물 :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농민과 사회》, 2006년 봄 재인용)

순위	업체명	금액	주품목
1	Tyson Foods Inc.	26,400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2	Cargill Meat Solutions (Excel)	13,000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3	Swift & Co.(ConAgra)	9,900	쇠고기, 돼지고기
4	Smithfield Foods Inc.	9,300	돼지고기, 가공육
5	Pilgrim's Pride Corp.	5,300	닭고기, 칠면조
6	Sara Lee Corp.	4,200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7	National Beef Packing Co. LLC	3,500	쇠고기
8	Hormel Foods Corp.	3,300	돼지고기, 가공육
9	OSI Group LLC	3,30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0	ConAgra Foods Inc.	3,00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etc 그룹은 <Oligopoly Inc.2005>를 통하여 기업 집중 현상이 식품과 농업에서뿐 아니라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¹¹⁾

미국 농무부도 매출액 상위 4개 업체들의 출하액 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CR4 분석을 통해 농식품 산업이 소수 기업으로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¹²⁾이 보고서를 보면, 2002년 미국의 식품가공 산업 중 44개 산업의 CR4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R4가 높은 산업으로는 맥주(91%), 맥아(91%), 사탕무 설탕(80%), 콩 가공산업(80%) 등이 있다.

미국 내 10대 식품가공업체 (2004년)¹³⁾

(단위 : 100만 달러)

상위 10대 기업	매출액 (US \$)	생산물종류
1. Nestle S.A.	616억 1500만 \$	복합

11) http://www.etcgroup.org/upload/publication/pdf_file/44

12) Steve W. Martinez, 「The U.S. Food Marketing System: Recent Developments, 1997-2006,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May 2007

13)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2. Archer Daniels Midland Co.	361억 5100만 \$	첨가물, 곡물가공
3. Kraft Foods Inc	310억 1000만 \$	복합
4. Unilever plc	299억 3800만 \$	복합
5. Cargill Inc.	272억 6000만 \$	곡물가공
6. Pepsi Co. Inc	269억 7100만 \$	음료, 스낵
7. Tyson Foods Inc	245억 4900만 \$	육류, 가공
8. Coca-Cola Co.	210억 4400만 \$	음료
9. Mars Inc.	170억 \$	제과
10. Groupe Danone	148억 5000만 \$	유제품, 생수

식품가공의 경우에도 2000년에 쇠고기(81%), 돼지고기(59%), 닭고기(50%)에 달하고 있다. 타이슨 푸드, 카길, 스위프트(콘아그라) 등 거대기업은 미국 내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하는 식품가공 산업에서도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미국의 식품산업 구조에서 인수합병이 감소했다. 하지만 유통단계까지 포함하는 수직 결합과 다른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 등과 같은 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초국적 거대기업은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10대 유통업체¹⁴⁾

(2004년기준, 단위: 10억달러)

순위	업체명	원국적	매출액	해외판매비중
----	-----	-----	-----	--------

14)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1	Wal-Mart Stores Inc.	미국	309.4	22.20%
2	Carrefour S.A.	프랑스	113.0	50.90%
3	Ahold N.V.	네델란드	89.4	83.40%
4	Metro Group	독일	77.8	47.70%
5	Tesco Plc	영국	68.2	20.70%
6	Ito-Yokada	일본	63.2	32.10%
7	The Kroger Co.	미국	58.6	0.00%
8	Rewe Zentral AG	독일	54.8	28.40%
9	Target Corp	미국	53.9	0.00%
10	Costco Wholesale Corp.	미국	51.2	19.70%

미국 식육 및 곡물 가공 산업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¹⁵⁾

구분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CR4)			
식육가공	쇠고기	36%(80년)	72%(90년)	80%(95년)	81%(00년)
	돼지고기	34%(80년)	40%(90년)	46%(95년)	59%(00년)
	닭고기	44%(90년)	46%(94년)	49%(98년)	50%(00년)
곡물가공	소맥	40%(82년)	44%(87년)	56%(92년)	61%(00년)
	옥수수	63%(77년)	74%(82년)	73%(92년)	74%(97년)
	대두	54%(77년)	61%(82년)	71%(87년)	83%(97년)

15) The Food Institute Report(Vol. 73, No. 29), 2001. 7. 11.
 Heffernan, W.(1999). GIPSA, Packers and Stockyards Statistical Report(GOPSA-SR-01-1), 2001. 11.
 (http://www.foodcircles.missouri.edu/CRJanuary05.pdf.) (윤병선, 「한미 FTA에 숨어 있는
 괴물 :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농민과 사회》, 2006년 봄 재인용)

미국 식품가공 산업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2002년)¹⁶⁾

산업	CR4 <30%	산업	CR4 >70%
신선·냉동 수산가공	20	맥주	91
육가공	24	맥아(엿기름)	91
상할 수 있는 가공식품	24	사탕무 설탕	80
채소 및 과일 통조림	24	콩 가공	80
조미료 및 음식 액기스	29	시리얼	78
		기타 스낵	75
		증류주	71
		특수 통조림	71

3.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을 통한 괴물의 탄생

미국 곡물기업의 수직적 통합

단계	업종	업무	주요업체
농산물 생산	농업용화학제품 및 종자업체	농약, 비료, 종자 등 농사에 투입되는 자재생산	몬산토, 다우, 듀폰, 바이엘, 신젠타 등
원료 농산물	농산물가공업체	농산물과 가축을 구매·가공	카길, ADM, 콘아그라/IBP, 타이슨, 스미스 필드 등
식품 가공	식품 가공업체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브랜드를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	네슬레, 필립 모리스, 유니레버, 펄시코, 코가콜라
유통	식품 유통업체	가공식품과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	월마트, 까르프, 아홀드, 크로거, 테스코 등

16) Steve W. Martinez, 「The U.S. Food Marketing System: Recent Developments, 1997-2006,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May 2007, p23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은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과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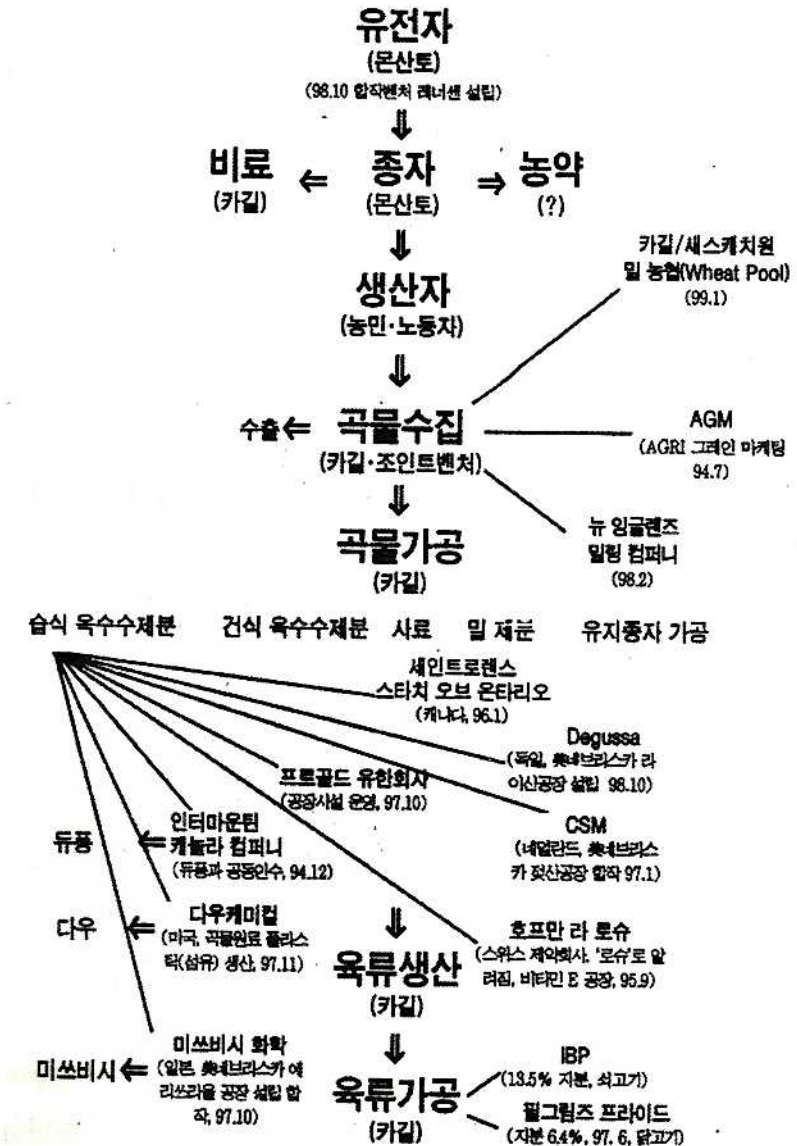
수평적 통합은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동종 업체간의 인수 및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한다. 미국 곡물기업의 수평적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 ADM과 콜린우드의 합병, 1999년 카길(25% 시장점유)과 콘티넨탈(20% 시장점유)의 합병을 들 수 있다. 1990년~1998년 기간 동안 미국 곡물기업은 91건의 합병 및 인수와 24건의 전략적 사업 제휴를 하였다.

초국적 농식품 독점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대표적 사례로는 카길과 몬산토의 전략적 제휴와 ADM과 노바티스의 전략적 제휴를 들 수 있다. 1998년 카길은 몬산토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유전자 기술 합작회사인 '레네젠(Renessen)'을 설립했다. 유전자조작 회사 몬산토의 특허 종자와 카길의 비료와 듀폰사의 농약으로 기른 농작물을 카길-몬산토의 합작 벤처가 수집한다. 카길은 이 곡물을 가공하여 식품 및 사료를 만든다. 카길의 사료는 육류생산에 투입되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다시 카길에 의해 도축·가공되어 유통된다.

수직적 통합이란 '종자에서부터 슈퍼마켓까지'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농작물의 재배에서부터 가공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곡물기업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종자 등 농자재에서부터 원료 농산물 가공, 식품 가공, 농식품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와 업종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이 수직적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것은 한 분야에서 실패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흑자를 내면 그 손실이 상쇄되는 교차보조(cross sussidary)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카길과 몬산토의 전략적 제휴>17)

카길-몬산토 조인트 벤처와 전략적 제휴



17) 류수현, 「곡물메이저의 농업지배 -카길·ADM을 중심으로」, 『농민과 사회』, 2004 봄,

4. 누가 종자를 지배하고 있는가?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이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의 정도를 높여감에 따라 농업 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져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통해 환금성이 높은 단일작물을 재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일작물 재배는 GM 기술이 도입된 특허 종자의 판매와 다량의 살충제와 비료사용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공장형 농업은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고 식품안전을 위협하게 되었지만,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에게는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주었다.

세계 상위 10대 종자 기업 (2006)¹⁸⁾

상위 10대 기업	2006년 판매액(US \$)
1. Monsanto (미국)	40억 2800만 \$
2. Dupont (미국)	27억 8100만 \$
3. Syngenta (스위스)	17억 4300만 \$
4. Groupe Limagrain (프랑스)	10억 3500만 \$
5. Land O' Lakes (미국)	7억 5600만 \$
6. KWS AG (독일)	6억 1500만 \$
7. Bayer Crop Science (독일)	4억 3000만 \$
8. Delta & Pine Land (미국, 몬산토 인수)	4억 1800만 \$
9. Sakata (일본)	4억 100만 \$
10. DLF-Trifolium (덴마크)	3억 5200만 \$

2006년 현재 전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229억 \$(22조 9천억 원)에 달하며, 상위 10대 종자기업이 125억 5900만 \$(12조 5590억 원)로 5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18) ETC Group, 「The World's Top 10 Seed Companies - 2006」, 2007.4.30
(http://www.etcgroup.org/en/materials/publications.html?pub_id=615)

이들 상위 10대 종자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996년에는 26%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 49%에 이르렀으며, 2006년에는 전체 시장의 55%를 차지하게 되었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등 3대 기업은 85억 5200만 \$ (8조 5520억원) 어치의 씨앗을 판매하여 전체 종자시장의 44%를 점유했다.

종자시장의 특징은 농민의 고유 권한에 속하던 종자가 특허라는 명목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 대부분의 종자회사들이 특허 종자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종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씨앗을 수확하는 공적영역에서 특허를 통한 개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적영역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GM 종자의 경우 농가 간의 상호 교환이나 판매를 금하는 것은 물론 자가 채종을 통해 종자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몬산토 등 종자기업들은 감시원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GM종자 특허를 침해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들은 터미네이터(terminator)기술이나 트레이터(traitor) 기술로 알려진 유전자 활성 통제 기술(Genetic Use Restriction Technologies: GURTs)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종자를 영원히 독점하려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록 이러한 기술들이 GM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농민단체들의 항의로 현재는 모라토리엄 선언 상태에 있지만 이윤에 눈이 먼 기업들은 이 기술의 상업화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2006년 전 세계 특허 종자시장의 규모는 무려 196억 \$(19조 6000억 원)에 달했다. 다시 말해 전체 종자시장의 85.6%가 특허 종자였다. 뿐만 아니라 상위 10대 종자기업은 특허 종자시장의 64%를 점유했다.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은 특허 종자를 매개로 농약, 살충제, 제초제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종자 시장은 세미니스 코리아(31.9%), 농우 바이오(18.5%), 신젠타 코리아(8.1%), 코레콘(7.2%), 동부한농화학(4.6%) 등의 기업들이 판매액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종자회사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멕시코의 세미니스에 인수되었다가 몬산토에 합병되었다. 몬산토 코리아는 금호몬산토로 출발하여 몬산토의 세미니스 인수에 따라 금호몬산토 종묘사업부는 세미니스와 합병을 하여 국내 종자산업 점유율 1위 기업이 되었다. 서울종묘는 노비타스(미국)에 인수된 후 신젠타(스위스)에 합병되어 신

젠타 코리아로 바뀌었다. 청원종묘는 다키이(瀧井) 종묘(일본)에서 인수하여 코레곤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농우바이오는 농우종묘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국내 5대 상위 종자기업 중 유일한 국내기업으로 남아 있다. 씨드텍코리아는 흥농종묘 연구원 출신이 만든 벤처이며, 현대종묘 : 서울종묘, 중앙종묘, 동부한농의 퇴직자들이 만든 벤처이다. 현재 국내의 무, 배추, 고추 종자의 5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공급하고 있으며, 양파, 당근, 토마토 종자는 전체의 8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이 국내 종자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해마다 종자사용료(로열티)로 지불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02년 국제식물신품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2002년 13억, 2004년 50억, 2006년 123억 원의 종자 사용료를 지불했으며, 2007년에는 약 16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종자시장이 연간 1400억 원 규모 정도로 추정되므로 로열티로 지불된 금액이 국내 종자시장의 11.4%에 해당된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현재 국내 종자시장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 누가 독약(농약)의 군주로 군림하고 있는가?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종자와 농약은 패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GM 콩 종자(Roundup Ready Soybean)를 경작하는 토지에는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 같은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2004년 전 세계 농화학 산업 매출(제초제, 곰팡이 제거제, 살충제)은 354억 \$이었다. 농화학 산업 상위 10대 기업들은 전체 시장에서 대략 84%를 차지했다. 바이엘(17%), 신젠타(17%), BASF(12%), 다우(10%), 몬산토(9%), 듀폰(6%) 등 상위 6개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살충제 시장의 71%를 차지했다. 그리고 상위 2개 회사가 전체 농화학 시장의 1/3을 차지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한국의 농약 사용량은 2001년 12.4kg, 2002년 12.8kg, 2003년 12.7kg, 2004년 13.0kg, 2005년 12.8kg, 2006년 12.9kg, 2007년 13.1kg으로 2위 네덜란드(8.00kg)보다 1.5

배 이상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OECD 29개국 중 가장 농약 사용량이 적은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0.60kg)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양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2006년 기준 국내 농약시장의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상반기 국내 농약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동부한농화학(21.6%), 경농(14.9%), 신젠타 코리아(10.6%),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10.6%), 동방 아그로(10.2%), 한국 삼공(9.8%), 영일 케미칼 (9%), 정보화학(5%), 동부정밀화학(3.8%) 순으로 알려졌다. 작물보호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매출액 상위 5개 농약은 1위 파라코액제(503억 3100만원, 신젠타 코리아), 2위 카보입제(266억 5800만원), 3위 에바멕틴벤조에이트 유제(253억 2200만원), 4위 만코지수화제(233억 3800만원), 5위 글라신액(215억 7500만원)이다. 농약시장의 규모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작물보호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 판매액 5개 제품이 전체 농약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 10대 상위 살충제 기업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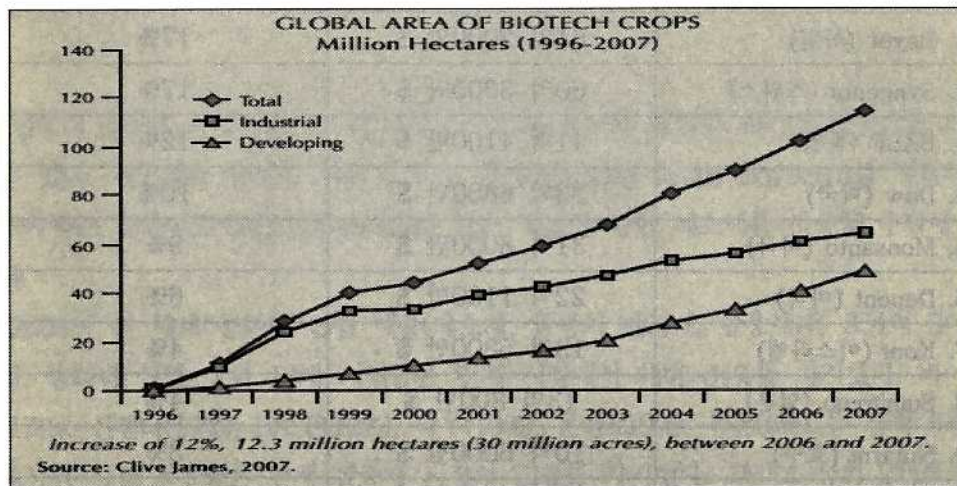
상위 10대 기업	매출액 (US \$)	시장 점유율
1. Bayer (독일)	61억 2000만 \$	17%
2. Syngenta (스위스)	60억 3000만 \$	17%
3. BASF (독일)	41억 4100만 \$	12%
4. Dow (미국)	33억 6800만 \$	10%
5. Monsanto (미국)	31억 8000만 \$	9%
6. Dupont (미국)	22억 1100만 \$	6%
7. Koor (이스라엘)	13억 5800만 \$	4%
8. Sumitomo (일본)	13억 800만 \$	4%
9. Nufarm (호주)	10억 6000만 \$	3%
10. Arysta (일본)	7억 9000만 \$	2%

19)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6. 누가 유전자 조작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나?

2007년 전 세계 GM 재배면적은 1억 1430만 ha(전 세계 면적 15억 ha 중 8%)에 해당에 달한다. GMO 재배면적은 1996년에 비해 무려 67배가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1억 200만 ha)에 비해 12%(1230만 ha)가 증가되었다. 전 세계 GM 경작지 중 87.5%인 1억ha에 몬산토의 GM 작물이 재배되었다. 또한 전체 GM 재배 면적의 9%인 1,120만 ha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작물이 재배되었고, 재배면적의 90%가 미국에서 재배되었다. 미국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용 GM옥수수를 700만 ha에서, 바이오디젤생산을 위한 GM대두를 340만 ha, GM캐놀라 10,000 ha를 포함한 총 1040만 ha에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GM 작물을 재배했다. 총 23개국의 GM 재배 국가 중에서 미국이 5770만 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GM 재배 면적의 50%에 해당한다.

전 세계 유전자조작 농작물 재배면적 (1996~2007)²⁰⁾



20) Clive James(ISAAA),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07」, 2008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추이²¹⁾

단위: 100만 ha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국	1.5	8.1	20.5	28.7	30.3	35.7	39.0	42.8	47.6	49.8	54.6	57.7
세계	1.7	11.0	27.8	39.9	44.2	52.6	58.7	67.7	81.0	90.0	100.2	114.3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비율²²⁾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콩	54%	68%	75%	81%	85%	87%
옥수수	25%	26%	34%	40%	47%	52%
목화	61%	69%	71%	73%	76%	79%

유전자조작(GM)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숫자는 2005년 850만 명에서 2006년 1억 30만 명, 2007년 1억 2천만 명으로 16% 증가하였다. 유전자조작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가운데 90%인 1100만 명은 중국,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농민이다. 1100만 농민 중 대부분이 Bt목화 재배농이다. 이들 Bt 목화 재배농은 중국에 710만명(Bt목화)이 있으며, 인도에 380만명(Bt목화)이 있다.

작물별로는 유전자조작 콩(대두)이 전체 재배면적의 57%인 5860만 헥타르에서 재배되어 1위, 옥수수(25% 3520만 헥타르)가 2위, 면화(13% 1500만 헥타르)가 3위, 캐놀라(5% 550만 헥타르)가 4위 기록했다.

2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6 바이오안전성 백서」, 2006, p145
 여준호, 유진춘, 「한미 FTA가 초래할 GMO 관련 식품유해성 및 농촌·생태계 파괴」, 《농민과 사회》 2006 가을, p 24
 Clive James(ISAAA),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06」, 2007.
 Clive James(ISAAA),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07」, 2008.

22) 미 농무부 농업통계국(www.nass.usda.gov)

작물별 GMO 재배 현황²³⁾

(단위 : 백만ha)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대두	0.5	5.1	14.5	21.6	25.8	33.3	36.5	41.4	48.4	54.4	58.6	58.6
옥수수	0.3	3.2	8.3	10.1	10.3	9.8	12.4	15.5	19.3	21.2	25.2	35.2
면화	0.8	1.4	2.5	3.7	5.3	6.8	6.8	7.2	9.0	9.8	13.4	15.0
캐놀라	0.1	1.2	2.4	3.4	2.8	2.7	3.0	3.6	4.3	4.6	4.8	5.5
기타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총계	1.7	10.9	27.8	39.9	44.2	52.6	58.7	67.7	81.0	90.0	102.0	114.3

몬산토와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농기계제조업체 디어, 듀폰 등은 '풍부한 식량과 에너지를 위한 연대'(AAFE, Alliance for Abundant Food and Energy)라는 바이오 에너지 로비단체를 결성하여 곡물을 이용한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8년 미국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22%가 바이오 연료 생산에 투입됐으며, 2008년 전체 곡물 생산량의 33%가 에탄올을 만드는데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GMO 농산물 비율²⁴⁾

(단위 : 1000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GMO	비율	전체	GMO	비율	전체	GMO	비율
콩	1,012	776	76.7	794	570	71.8	525	319	60.8
옥수수	490	-	0	59	-	0	503	0.01	0
감자	15	-	0	5	-	0	2	-	0
쌀	65	-	0	62	-	0	-	-	0

미국에서 수입되는 GMO 콩의 주요 용도는 99%가 식용유이며, GMO 옥수수는 2002년 7월 스타링크 사건 이후 수입실적이 없다가 2006년 전분당류 제조용으로 12

23) ISAAA,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통계자료

24)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식약청 통계자료

톤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일반 농산물에서 비의도적 혼입을 3% 내의 GMO를 허용하고 있으며, 원료를 가공한 경우는 GMO 표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미국산 농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류에 상당수의 GMO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식용유 제조용으로 수입되는 LMO 콩은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식용콩 수입량의 약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LMO 옥수수는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다.

GM옥수수는 전체 교역량의 77%(7200만 톤)이며, GM콩은 전체 교역량의 91~94%(6600~6800만 톤)에 이른다. 또한 주요 수출국(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 아르헨티나는 non-GM과 GMO의 구분관리가 거의 없으며, 미국에서도 non-GMO 구분 관리물량은 5~7% 수준매우 제한적이다. non-GM옥수수의 경우도 전체 수출량의 5~7%인 300~400만 톤에 불과하다.

2006년 7월 27일자 <인디펜던트>는 퍼 핀스트럽-앤더슨 미 코벨대 식량영양 공공 정책과 교수팀이 GMO와 일반 농산물이 농약사용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코벨대 연구팀이 중국의 유전자 변형 목화 재배 농민 481명을 조사한 결과 초기 몇 년간은 살충제 살포량이 감소했으나 7년 후에는 일반 목화 재배 시 사용하는 살충제와 똑같은 양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Bt목화 재배업자는 일반 목화 재배업자에 비해 목화다래벌레 살충제를 46% 이상 줄였으나, 기타 살충제를 40% 이상 더 사용했다.

아울러 해충저항성 GM 종자의 재배기간이 늘어날 록 해충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농약에 대한 내성이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GMO 재배농가의 소득도 초기 몇 년은 농약 살포량 감소와 수확량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7년 후에는 오히려 일반 작물 재배농가에 비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7년 후에는 농약 살포량의 차이가 없는데다가 일반 종자보다 3배나 비싼 GM 종자를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세계 상위 10대 생명공학기업(2004)²⁵⁾

상위 10대 기업	수익(US \$)	2003년 대비 성장율
1. Amgen	105억 5000만 \$	26%
2. Monsanto	54억 5700만 \$	62%
3. Genentech	46억 2100만 \$	40%
4. Serono(스위스)	24억 5800만 \$	22%
5. Biogen Idec	22억 1200만 \$	226%
6. Genzyme	22억 100만 \$	28%
7. Applied Biosystems	17억 4100만 \$	3%
8. Chiron	17억 2300만 \$	-2%
9. Gilead Sciences	13억 2500만 \$	53%
10. Medimmune	11억 4100만 \$	8%

전 세계 309개 생명공학 기업의 매출액은 총 465억 3300백만 \$에 달하며, 이 중에서 상위 10대 기업이 72%에 달하는 334억 \$을 차지하고 있다. 309개의 생명공학 기업 중 3/4가 미국에, 15%는 유럽에, 8%가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309개 생명공학 기업 중 82%는 인간 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14%는 서비스 공급(기능적 게놈 연구나 high-throughput screening같은 R&D 서비스)과 관련이 있으며, 오직 3%만이 농생명 공학과 관련이 있다. 몬산토-카길의 제휴, 신젠타-ADM의 제휴 사례처럼 GMO를 매개로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거대기업들은 이윤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보다도 더 빠르고 활발하며 강력한 연대체를 형성하고 있다.

25) ETC Group, 「Oligopoly, Inc. 2005」, 2005.12.16
(<http://www.etcgroup.org/en/materials/publications.html?id=42>)

7. 한국의 식품안전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까지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탐욕스러운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에 맞서 한국의 식품안전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현실의 운동 속에서 기업세계화 반대를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FTA나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세계화와 건강 문제, 그리고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현실 운동과 접목시켜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창립하는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식품안전 정책은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1%의 재벌 및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99%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몇몇 관변 소비자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식품안전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한 채 정부와 기업에 포섭되어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는 활동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이 있다. 앞서 밝혔듯이 식품안전 문제는 생태, 환경, 소비자, 농민, 농업, 지역사회, 보건의료, 건강, 과학, 식량위기, 기아 및 빈곤의 문제와 총체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미시적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부의 불균등으로 인한 빈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등의 민영화 또는 사유화는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식품안전운동은 민주주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동과 공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과 국내 재벌기업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를 근거로 다양한 민중운동조직,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조직들의 연대를 통한 일상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초국적 농식품 거대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조사연구하는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형 조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품안전운동은 직접적 행동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일상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

도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행동이 필요한 사안도 있고, 지방의 풀뿌리 조직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사안도 있다. 현실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식품 전운동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와의 연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농민운동, 지역 먹을거리 운동(로컬 푸드), 생협, 학교급식, 도농직거래, 농민장터, 착한 소비운동 등이 식품안전운동을 매개로 서로 연대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대 속에서 도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운동과 농민 중심의 식량주권운동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농식품 속에 들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유해 화학물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검사기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농식품부 산하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이나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이나 보건환경연구소 등 정부기관의 검사기관이나 거대기업들의 검사기관,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검사기관들은 객관성과 정직성을 의심받고 있다. 검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식품안전운동을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검사기관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기관을 대학에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법인 형태의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관변적 성격의 소비자보호원을 민주화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식품안전운동은 제3세계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농업의 환경, 생태적 기능을 고민해야 한다. 빈곤과 기아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농업·농민·농촌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따라서 식품안전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나 위험관리 영역으로 축소시킬 수 없으며, 기업세계화를 막아내고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서 실천하는 문제이다.

여섯째, 식품안전운동은 정부, 기업, 전문가, 대중 사이의 위험정보교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고민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광우병, 조류독감, 멜라민, 포르말린, 항생제 잔류 등의 위험정보를 정부, 기업, 관변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고, 그 정보들을 비판적 전문가들이 올바르게 해석해서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대중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에 잔류하는 항생제 잔류물질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중들이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O157 대장균 등 병원성 미

생물에 대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도 일상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중들이 객관적 검사기관에 검사의뢰가 가능하고, 그 검사결과를 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판적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식품안전운동은 올바른 법, 제도 개선운동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물론 문화와 관행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형식적이 될 가능성도 높겠지만, 식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하여 원산지 표시, GMO표시, 첨가물 성분 표시 등 다양한 표시제도, 쇠고기 등 식품의 이력추적제도,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

생의학(biomedicine)연구와 보건의료정책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 Stem Cell Rsearch: Medical tourism ?

○ 황우석 사태 이후의 줄기세포 연구 정책

—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 수립 (06.5) : 2015년까지 주요 난치 질환 임상적용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줄기세포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줄기세포 분야 top 3 진입)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천기술확보(기초연구 및 국제협력), 체계적 임상연구(임상강화를 통한 실용화 촉진), 인프라 구축(줄기세포은행 설립), 생명윤리 정착(제도 정비 및 홍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07년 약 350억 투자)

○ 세포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 2004년 불법 임상시험 논란. 88명의 참여자에게 줄기세포 투여 (대머리부터 강경변까지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함). 동물실험, 임상계획서, IRB, 동의서, 투여량 같은 기초적인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시술자 개인의 경험에 의해 실시. 특히 임상시험 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었음. 거액의 치료비를 들였지만 상황이 거의 대부분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다른 치료기를 놓치는 부작용 발생. 일부 시민단체는 사기죄로 이들 업체와 병원을 고발. 대부분 병원(의사)-벤처 기업의 결탁으로 발생.

— 2004년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개정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합법적 임상시험이 가능해짐. '응급임상'과 '연구자임상'의 범위 확대. 임

상 효과가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상시험이 가능. 안정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IRB 심의를 거치면 식약청장이 승인 가능.

— 몇 년 전에 비해 제도가 일부 개선된 측면(결과보고)이 있지만 불치병에 대한 세포치료의 유용성, 참여자(환자)의 권리, 특히 및 기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접근권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음.

○ 난자시장 ?

— 배아줄기세포연구(복제 및 잔여배아 이용)에는 다량의 난자나 배아가 필요함.

황우석 박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아 연구용으로 사용했음. 이중 63명 1,336개의 난자를 매매로 제공받았으며 불임시술비 감면과 같은 형태로 22명 313개를 제공 받았음. (매매자 평균연령 24.4세, 전체평균 32.6세) 미즈메디 병원의 경우 79명의 난자 제공자 중 15명이 과배란 증후군으로 내원한 바 있음. 부작용 발생 비율 17.7%

— IVF tourism: USA, South Korea and Spain, Romanian model

— 2006년 1월 현재 국내에는 122개 불임클리닉과 44개의 배아연구기관 6개의 체세포복제 연구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05년에 생성된 배아는 122,698, 05년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85,629로 총 208,327개의 배아가 생성되었음. 이중 93,921 개가 보관 중임. (이메일 및 서면조사)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2008.6)으로 연구용 난자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난자 제공자 건강검진, 제공 빈도 제한, 실비 보상 가능 등이 포함 됨) 잔여배아 및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 됨 (제 2의 stem cell hub?)

○ 세포치료, 불임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 ?

-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은 줄기세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줄기세포 임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세포치료 관광'이 성행하고 있음.
- 세포치료에 대한 임상을 국가가 장려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세포치료, 면역치료, 유전자 치료, 불임 클리닉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병원 및 보험 시스템의 변화 뿐만 아니라 각종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 수반 (제주도, 송도 ?)

□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GWAS)

○ 맞춤의학 ?

- 인간유전체사업 완성이후 인간 유전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개별 유전자에 대한 기능 연구에서 벗어나 유전체의 다양성,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런 연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유전적 차이나 개인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유전자의 기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개인별 '맞춤의학(personalised medicine)'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한국형 Biobank: 세계최대 규모?

- biobank²⁶⁾ 는 DNA를 추출 할 수 있는 혈액이나 소변과 같은 생물학적 시료와 의료정보, 라이프스타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활용·분양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런 흐름에 따라 과거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검체들에 대한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음.

26) OECD는 Human Genetic Research Database라는 용어를 '연구를 위해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시료와 의료 정보와 같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했다. 이 정의 안에는 genebank, biobank, population database, genome database, cohort 등이 포함됨.

- Biobank는 특성상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유지 방안, 소유권 및 상업화, 동의 절차, 철회 권리, 결과의 사회적 활용, 사회적 합의 방식, biobank의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해 다양한 쟁점과 논란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는 개별 유전자은행들과 질병관리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유전자은행들을 서로 연결하고, 추가하여 100만(정부 발표 50만) 규모의 대규모 한국형 biobank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음.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생물자원관리 방안에 따르면 "인체유래 생물자원을 미래의 창출을 위한 소중한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거대 biobank 구축을 통해 "실추된 국가연구 신인도를 회복시키고 국제적 연구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5년간 약 2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수집한 약 20만명 분의 자원에 13개 코호트(cohort)를 통해 30만명, 12개의 질환별 단위은행과 대학의 조직은행으로 20만명, 건강검진을 통해 30만명 분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는 100만명의 검체와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07년 말 자료) 수집된 시료는 개별 은행(정부, 민간)에 보관되지만 모든 종류의 정보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수집된 DNA도 외부로 분양할 수 있음.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하는 등 혁신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은 과학적, 국가적 필요성만을 강조한 채 어떤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공론화는커녕 구체적인 내용조차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외국의 경우 입법을 통해 제기될 우려들을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했거나 자율규제로 설립한 경우에도 사전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틀을 가지

고 시작했음.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정부의 유전자은행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며, 비밀유지와 상징적 차원의 차별 금지 정도가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참여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대로 된 동의서를 받는 것임. 대부분의 biobank의 경우 수집된 시료와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포괄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향후 진행될 연구의 종류나 결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함. 합의된 목적과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음. (일부는 이미 기업으로 분양된 상태임) 한국형 biobank는 유전질환, 일반인, 진단목적의 검체 등이 포함된 다양한 유전자은행이 하나로 묶이는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관적이면서도 목적에 맞게 변형된 동의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익명화'와 '기관위원회(IRB)'활용임.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익명화는 개인 식별정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임. 필요한 경우 이 정보들은 언제라도 재결합이 가능함. 또한 IRB가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나 권리를 얼마나 대변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익명화'라는 기술적 방법과 '연구목적'이라는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50만 명이나 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당장은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크게 증가시킬 것임.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유전정보와 개인 의료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참여자의 자기결정권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임.

○ 맞춤형학과 의료의 공공성 약화?

— 이런 연구가 다른 형태의 연구에 비해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효과적인

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여전히 존재함. 중요한 것은 의료적 효용성을 떠나 새로운 연구형태, 담론 그리고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임. 이미 인간유전체사업을 거치면서 유전자의 과학적 의미나 한계와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는 인간의 이해에 있어 유전자 중심적 담론이 확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접 소비자의 유전자를 검사(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유전자에 대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될바 있음. 국내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약 20여개의 업체들이 영터리 유전자를 상업적으로 실시한바 있음.

— 중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유전적 차이를 통한 형질, 질병의 인식은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끝)

노동안전보건을 매개로 한 적록동맹의 가능성

한재각(에너지정치센터 운영위원)

1. 적록동맹(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은 왜 필요한가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관계는 적대적인가 아니면 협력적인가. 대개의 경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관계는 '일자리 vs 환경'이라는 대립구도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의 연대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미국 북서부 천연림 지대의 벌목을 둘러싼 노동자와 환경주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²⁷⁾ 한국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농업기반공사 노조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은 바가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경험은 지난 역사 속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
- 상징적인 한가지 사례가 1970년대 초에 있었던 호주 노동자들이 펼친 '녹색 금지(Green Ban)' 캠페인이다. 호주의 노동자들은 자연환경 및 역사적 유적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해당 작업장을 봉쇄하여 개발업자를 굴복시키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런 전통은 1980년대 호주 철도, 부두하역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우라늄 운송저지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되살아나기도 했다.²⁸⁾ 사실 1970년대를 전후로 해서 서구 각국에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종종 발견되며(미국의 경우는 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90년대 말에는 세계화에 반대하기 위한 시

27) 이와 관련하여 볼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존 벨라미 포스터, '계급을 배제한 환경주의의 환계 : 태평양 북서부의 고목림 수호 투쟁의 교훈',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책갈피, 2007.

28) 이를 이끌던 노조 지도자는 잭 먼데이(Jack Munday)는 이후 호주의 유력한 환경단체 호주보전재단(Austrian Coservation Foundation)의 집행위원을 맡기도 했다. 특히나 흥미로운 것은 독일 녹색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페트라 켈리가 녹색당 창당 이전에 호주에 와서 Green Ban을 보고 감명을 받았으며, 녹색(Green)이라는 용어를 중요한 정치 언어로 삼은 것은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레디앙 기고글, '광우병 위험, 노동운동 힘을 보여줘'(2008. 5. 13)를 참조.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731>

애를 투쟁 등을 통해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사이의 연대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노조와 환경단체 등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²⁹⁾

- 그런데 이와 같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왜 필요한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을 강화하고 내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특히나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적을 대면하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연대하지 않으면 각 운동이 지켜야 할 공익과 가치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보진영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진보의 재구성)에서 두 운동의 상호변화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생태없는 노동은 허무하고, 노동없는 생태는 위선적이다."

2.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연대의 공동 기반 : 노동안전보건 의제(미국 경험을 중심으로)

-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의 핵심적인 쟁점은 확실히 '일자리 대 환경' 혹은 '일자리와 환경'인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파괴적이고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을 규제하거나 혹은 축소시키려는 환경운동과 정부의 규제들은 그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립 구도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과장되거나 조작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환경파괴적인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에 환경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대 환경'의 대립 구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소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³⁰⁾
- 그러나 각각의 사회운동들이 서로 연대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은 공통의 관심 사항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상호작용된 경험을 쌓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진전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 대 환경'의 구도가 '일자리와 환경'의 구도로 변

29) 공공운수연맹, 에너지정치센터, 진보신당, 환경정의가 공동주최하였으며, 2008년 8월 22-23일 까지 강화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이 행사 자료집에 실린 필자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한재각, '적록연대(노동-환경운동)의 몇가지 해의 사례', 제1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 자료집(강화도, 2008. 8. 22)

30)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소개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하여>, 2008년 1월, 특히 3장을 참고할 수 있다.

화할 수 있었던 것에는, 노동안전보건(넓게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연대하였던 경험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경험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는 1970년대 환경보호법과 직업안전보건법 등의 제정 과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연대 사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80년대의 위스콘신 노동-환경 네트워크(the Wisconsin Labor-Environmental Network: WLEN)의 사례이다.

- 미국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환경보호를 위한 투쟁의 선두자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³¹⁾ 특히 노동조합은 공중보건(Public health) 이슈로서 환경문제에 접근하였으며, 대기오염이나 수질 보호와 같은 문제나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1970년대 초의 청정대기법(The Clean Air Act, 1970)과 청정수질법(The Clean Water Act, 1972) 통과를 노동조합이 지원했으며, 또한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의 제정 과정에서도 일부 환경단체들이 지원을 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는 ‘작업장의 레이철 카슨’이라고 불리던 토니 마쭌치(Tony Mazzochi)와 같은 노동운동 지도자이자 환경운동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의 연대의 ‘파괴력’을 보여준 사건은 1973년에 일어났다. OCAW(석유화학원자력노조)가 셸석유(Shell Oil)사를 대상으로 직업안전보건 문제로 벌인 파업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1개 환경단체가 지지한 것이다. 비록 이 파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파업 이후, 지지자들 반대자들 이런(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의) 연대의 힘을 인식했고, 진보운동(Progressive movement)의 전략가들은 이 공동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³²⁾

- 한편 1980년에 반규제적인 성향을 가진 레이건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산업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존의 규제기구(OSHA, EPA)를 방어하기 위해서 연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AFL-CLO과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은 1981년에 시카고에서 전국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지도자들이

31) Brian K. Obach, Labor and the Environmental Movement - The Quest for Common Ground, MIT Pr. 2004, p. 47.

32) Obach, 앞의 책, 50쪽.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주(州) 수준에서 <OSHA-환경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OSHA와 EPA를 방어하기 위한 로비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노조 및 환경단체 활동가 간의 제휴 집단(coalition groups)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조와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을 낫을 잠재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회의 결과로 <위스콘신 노동-환경 네트워크(WLEN)>이 구성이 되었고, 지역내 대부분의 노조와 환경단체들이 참가하였다.

- WLEN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The worker Right-to-Know)’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외에 환경규제로 인해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고용의 문제와 선거시기의 투쟁에서도 연대를 했다. 더 나아가 WLEN은 ‘공동체의 알 권리(The Community Right-to-Know)’을 위해서도 활동하였다. 공동체의 알권리는 노동자의 알 권리와 다르게, 노동자의 이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역 공동체가 이렇게 확보된 정보에 기반하여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중지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대 경험을 통한 신뢰에 기반하고 의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연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³³⁾.

- 그런데 이와 같은 연대의 경험에서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우선 ‘노동계급 환경주의(working-class environmentalism)³⁴⁾이다. 이것은 도시 오염, 독성 폐기물, 깨끗한 공기와 물에 대해서 보다 크게 강조하는 한편, 멸종위기종의 보전, 습지 유지, 국립공원의 확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덜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류 환경주의”와 구분된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전국에 걸쳐 작업장과 환경의 오염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한 일반 노동자들의 우려와 저항을 반영한 것이다. 작업장과 환경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와 환경주의자들 사이의 연계가 늘어났고, 이들은 대기업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오염의 뿌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33) 이외에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에 갈등이 타협되면서 협력이 유지되거나(재활용 제도의 도입 사례), 타협되기 어려운 차이(유해 화학물질 사용 규제제도 도입 시도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음. 노조 조직물의 하락, 환경운동의 쇠퇴 등의 외부 조건과 함께, WLEN은 1994년에 활동이 정지되었음.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앞의 글을 참조.

34) 노동자와 노동계급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오염과 정화, 계급 불평등 그리고 천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장기적 보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이라고 정의된다.

는 이러한 인식적/이데올로기적 기반(노동계급 환경주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또 미국에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에서 이루어진 초기 경험은 이 연대가 가진 취약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연대는 1973년경부터 나타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다. 이런 상황은 노동조합이 고용 축소의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었고, 기업주들은 부가되는 환경규제를 회피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 대 환경'의 대립 구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환경주의자들은 '완전고용을 위한 환경주의자들(EFFE)'이라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녹색 일자리(Green Jobs)' 창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3.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경험(지하철 석면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에서도 직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경험은 종종 발견된다. 우선 1980년대 한국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반공해운동에는 지금의 보건의료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이 융합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진레이온 투쟁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운동들이 분화되고 소위 '칸막이 문화'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사이의 연대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발견된다. 몇년전 LG칼텍스 노조가 환경안전 이슈를 내걸고 파업을 했으나,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시민단체들이 별다른 관심과 지지를 하지 않은채 패배했던 경험까지 있다. 그런 속에서도 직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발견되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의 연대의 경험이 있다. 지하철노조와 환경운동연합의 석면문제 공동대응 활동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³⁵⁾

- 이 연대활동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미세먼지를 포함한 실내공기가 심각하

35) 허철행, '국내노조와 시민사회의 연대 사례 - 서울지하철노조와 환경운동연합의 석면 문제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제1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 자료집(강화도, 2008. 8. 22)를 참조하였다.

게 오염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것은 지하공간에서 생활하는 지하철 노동자의 건강문제이기도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문제이기도 했다. 2000년 4월 지하철노조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원진연구소가 지하공간의 대기오염 문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공식적으로 1996년부터 제기하였던 석면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노조에 가해지는 구조조정 위협 등과 겹치면서 연대활동은 소강국면에 들어갔다가, 2007년 초를 전후로 해서 다시 연대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석면물질이 비산되는 뽕질형태의 석면'을 발견한 이후에, 다시 지하철노조와 환경연합 및 원진연구소 등이 연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석면추방네트워크'로 발전하였으며, 2008년에는 '아시아 석면추방 네트워크'를 결성하기까지 이르렀다.

- 이 연대 활동은 몇가지 특징을 가진다. 지하공간의 대기오염은 노동자의 건강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시민의 건강 문제와 겹친다는 점이다. 노동운동과 환경(시민)운동이 연대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의 기반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환경(시민)운동 사이의 연대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노조에 대한 위협이 그런 연대를 맺고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의 장애물도 심각한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타협적 정서', '시민단체의 관료화와 서울지하철 노동진영의 보수화', '활동방식의 차이와 인간 관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³⁶⁾

4. 정리하면서

- 이 발표문에서 필자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적극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공동 기반으로서 혹은 출발점으로서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연대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이며, 또한 한국에서 노동안전보건의 의제가 그런 연대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출입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기는 힘들다. 다만, 사회운동 간의 연대의 창출에서 그 사이를 매개하면서 소통과 신뢰를 형성시키는 '다리(Bridge)'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과대안> 연구소가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

36) 허행철, 앞의 글, 36쪽.

여성빈곤과 건강

문현아(여성문화이론연구소 운영위원)

여성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려니 일단 대략난감이었다. 세계화와 건강이라고 하면 일단 세계화가 어떤 것인지 대략 설명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성에 대해서도 여성을 대략 설명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 될까? 헉, 이 주제가 여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건강과 여성? 이렇게 하면 건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까? 근데 건강은 어떤 상황으로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러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상황을 떠올려보았다. '촛불소녀와 광우병'? 촛불소녀는 여성이며, 광우병은 건강과 관련되는 사안이다. 촛불소녀들이 자신들의 먹거리, 미래의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에게 먹일 먹거리를 생각하며 촛불을 들기 시작한 측면을 고려하면 '먹거리'가 여성과 직결되는 사안이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먹거리가 단순한 '건강'이 아닌 보다 포괄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사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여성과 건강이라는 쟁점이 '자유무역'이라는 틀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그 전에 우리를 과학도로 만들었던 황우석사태가 떠오른다. '난자매매'로 인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생명윤리 논쟁과 더불어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몸에 대한 권리가 과학적 '거짓'을 등에 업고 영리병원과 정부에 의해 얼마나 현실의 여성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절감했다.

그런 와중에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멜라민 사태가 또 한바탕 문제가 되었다. 일차적으로 유아, 그리고 그 유아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 관련자로서 '어머니'의 입장이 초점이 되었다. 이 사태에 직면해서 중국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아이의 건강을 대가로 이윤을 남길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했다.³⁷⁾ 그 어머니는 아이의 건강이 희생되면서 이윤을 챙기는 것에 황당해하며 분노했

37) Antoaneta Bezlova, "CHINA: Nothing Confucian About Toxic Milk", IPS, Oct. 10, 2008.

지만, 아이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대가로 이 사회가 이윤을 남기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분노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으로 여성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 연구공동체가 활동을 진행하면 "여성과 건강"이라는 주제는 대략난감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 시작인 측면에서 "여성빈곤과 건강"을 고민해보려고 한다. 여성빈곤의 측면에서부터 여성과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 연구공동체가 다루었으면 하는 쟁점들을 늘어놓으며 질문거리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보려고 한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여성과 연결시킬 때 이야기되는 핵심은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다. 13억으로 추정되는 세계 극빈층 인구 중 70%가 여성이라고 이야기된다.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 빈곤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며, 빈곤층 중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빈곤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에 덧붙여 여성이 처한 상황의 구조적 '빈곤성'도 강조한다. 구조적 빈곤성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빈곤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 정보나 자원과 같은 사회적 접근성에서의 빈곤성 역시 지적한다. 여성의 빈곤화는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라는 젠더가 처해있는 구조가 사회적 '빈곤'과 맞물리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의 경향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더불어 두드러졌다. 여성빈곤은 특히 이혼율 증가와 비정규직 증가라는 지표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이혼율 증가는 가족 내 여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여성의 현실이 드러난 수치이며 비정규직의 증가는 가족 밖, 즉 사회라는 영역으로 여성이 진출하며 진행되고 있는 또다른 빈곤의 현실이다. 이혼율이 여성빈곤과 연결되는 것은 이혼을 통해 여성이 대체로 기존의 경제 상태로부터 하향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당시 이혼의 일차적 원인이 '경제적'인 측면에 상당부분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으로의 진출 역시,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교형'이기보다 비정규직에 계속 머물게 되는 '함정형'인 현실 속에 빈곤으로 이어진다.

<http://ipsnews.net/news.asp?idnews=44208>.

여성이 활동하는 두 영역에서의 중심축이 IMF 경제위기와 더불어 '빈곤'으로 연결되는 사태는 신자유주의가 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쟁점으로 여성을 바라볼 때, 가족과 관계하는 소위 사적영역의 여성과 사회와 관계하는 소위 공적영역의 여성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여성빈곤은 여성이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서의 역할로 인한 제약이나 한계와 맞물리고, 다른 한편 사회에서 역시 구성원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다. 여성빈곤이라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사적/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한다.

2. 사회 재생산의 담당자로서 여성 그리고 건강

사회에서 여성을,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는 측면은 일차적으로 다음 세대 인류, 인간의 재생산의 측면에서다. 사회 재생산의 기본축이 되는 인간의 재생산, 그것과 직결되는 '여성의 출산'이 사회에서 여성의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의 출발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성의 출산이 사회재생산에서 핵심 사안이었고 현대의 국가 역시 그 맥락에 집중해왔다. 자본주의가 핵가족과 맞물려 사회의 기본구조로 '가족'을 강화하면서 특히, 출산을 하는 여성은 그저 여성이 아닌 '어머니'로서 자리매김되며 그 역할 역시 강조되었다. 가족제도 밖의 출산은 금지되거나 낙인찍히는 반면, 어머니의 출산은 상대적으로 '성스러운' 것처럼 보장되었다. 그러나 2000년 UN보고에 의하면 출산 관련해서 사망하는 여성이 연간 600,00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서 매년 1천 8백만 명이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다.

출산과 관련한 비극적 현실은 인구통제정책과 맞물려있다. 중국의 '한자녀 갖기'로 인한 국가의 강제적 낙태정책 이전에 한국에서도 1971년 경제개발계획에서 인구증가율 1.5%의 목표가 설정되면서 출산력 통제정책이 강행되었다. 인구통제와 맞물리면 출산과 관련된 수치의 증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여성의 인권, 건강권은 고려되지 못한다. 현재 한국은 낙태가 불법이지만 30년 전만 해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임시술을 강행하며 여성에 대한 피임과 낙태를 강요했다. 30년이 지난 '저출산'의 현실에서 국가의 인구통제정책은 인구장려로 바뀌었지만, 여

전히 여성의 권리, 여성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린 채 '수치'조절의 대상으로 여성을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구조절의 맥락에서 접근되는 여성의 재생산은 '권리'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이때 '권리'는 재생산을 결정할 권리에서부터, 재생산을 하지 않을 권리, 어느 경우에도 건강하게 과정을 경험할 권리를 포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덧붙여 재생산을 결정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 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권리를 포함하여 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남미나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HIV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부족이나 성폭력 등과 관련한 인식부족, 그에 따르는 적절한 의료대책의 미비로 건강하게 재생산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권리는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출산을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것으로 한정하는 인식으로부터의 변화도 수반해야 한다. 어머니로서의 출산은 인정될 수 있음에 비해, 혼외여성의 출산은 인정받지 못하며 싱글의 출산 역시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덧붙여 어머니로서 출산을 인정받겠다고 해도 현 의료보험혜택이 자연분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분만형태를 선택할 기회자체가 빈곤여성에게는 제한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육체적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하며 동시에 더 나아가 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지원도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맥락에서 재생산권을 존중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매우 미묘한 다각도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는 의료민영화와 맞물려 각종 '상품'으로 제시되면서 여성을 의료지원 서비스의 '소비자'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그 예가 된다. 상품으로 제시될수록 빈곤여성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에의 접근성은 약화된다. 뿐만 아니라 임신중 검진에 대한 의료기술지원이 단순한 태아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넘어 태아 내 유전자의 변형과 연결되면서 오히려 산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운증후군과 관련된 검사는 발견되면 산모가 아이를 지우는 것에 동의해야 진행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출산된 아이에 대한 책임과 지원은 모두 '여성' 개인 혹은 가족만의 부담으로 상정되는 식이다. 심지어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출산하는 여성을 '태아학대'로 취급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산모가 아이에게 저지르는 태아학대가 아니라 사회가 태아와 산모에게 가하는 또다른 형태의 사회적 폭력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재생산권에 국한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가

인식하는 태아, 아이, 더 나아가 인간의 '건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포괄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일하는 여성의 현실과 연결하여 사회적 지원을 고려하는 방향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출산휴가가 비정규직을 비롯해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의 여성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재생산과 관련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권 역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사회의 제도적 지원확보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 재생산의 담당자로서 여성, 여성의 출산은 인구통제의 맥락이나 사회경제의 측면을 기준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의 재생산권은 개인의 맥락을 넘어 사회가 '재생산'을 함께 담당하는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건강권이 보장되는 맥락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더불어 재생산을 하지 않을 권리 역시 동일한 맥락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3. 다차원, 다층적(multiple)으로 억압하는 가부장이데올로기와 위협받는 여성의 건강권

여성은 어머니로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만을 하는 존재도 아니다. 더 나아가 집 안에서만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도 아니다.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진출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러나 사회는 이렇게 다방면에 존재하는 여성을 다차원적이며 다층적으로 억압하며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1) 사회에서 노동하는 존재

앞에서 언급한 비정규직 여성의 현실은 사회에서 노동하는 존재로서 여성과 연결된다. 비정규직 여성이 당면하는 다양한 현실 중에서 '건강'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재를 통한 제대로 된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노동건강조건을 들 수 있다. 일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의 입지는 고용의 안정 못지않게 작업장 내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특히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정책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결과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착취공장(sweatshop)이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며 덧붙여 성폭력까지 당하는 속에서 이들 여성의 건강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국에서 시도되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이라는 캠페인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동하는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집에서 돌봄, 양육노동을 하는 존재

최근 의료산업부문에서는 돌봄, 간병서비스 부문의 여성서비스 노동부문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 이 직업은 집에서 여성들이 하는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 직종 중에서도 하위서비스직에 여성이 집중되는 것은 이런 일이 실제로 집안에서 하는 '돌봄'노동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이를 보면 전통시대에 집에서 소위 '며느리'나 딸같은 여성들이 '무임금'으로 희생하며 했던 일이, 그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제3자를 통해 저임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국제적 재생산노동의 3중 분업'으로 되는 이 구도 속에는 소위 제1세계 개인의 집에서 노인, 환자에 대해 소위 제3세계 여성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포괄된다. 이런 서비스직의 종사자들이 인종적으로 비-백인으로 계층화되는 맥락도 여성빈곤의 측면과 연결되는데, 이들이 노동하면서 겪게되는 '노동환경의 안전성' 역시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조망되어야 한다. 이들의 건강상황이 어떻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떻게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지는 사실 거의 아무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저임금으로도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집 안에서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양육노동이라는 비가시화되어 있는 측면도 이야기되어야 한다. 여성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가족 자체가 해결하는 문제로 환원된다. 그 공간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경우에도 소위 '산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돈을 받고 일하지 않는 주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이 경우 건강권은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지며, 더 나아가 출산을 하거나 중절과 관련된 이들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휴가에서부터 필요한 의료지원은 국가나 사회가 관여하는 공적인 영역의 혜택과 연결되지 못한다.

여성은 여전히 집이라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공간의 양측에서 '빈곤'하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끼여도 대체로 빈곤상태로 남아있다. 그 빈곤과 더불어

건강 역시 취약하다. 덧붙여 이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21세기 현실에서 '국적'과 관련된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는 건강의 측면에서도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혼 여성이나 이주(가사)노동자로서의 여성은 집 안에서 국내 여성이 갖는 취약성에 '국경'을 넘는 취약성이 더해져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 의료시설을 사용하는 존재

건강과 관련해서 '의료부문'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면 우선 의료보험체제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은 집안에서의 존재라는 맥락이 의료정책에서도 기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한 가족의 부인이라는 존재로서 의료보험적용 대상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피부양인으로 속해있다.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의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부양자 남편의 아내로서의 자리라는 것은 이미 건강권에 대한 접근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산부인과를 제외하면 주로 여성들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기보다 남편, 아이, 부모 등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 역시 '부차적'인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과 맞물려있다. 혹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더라도 이미 여성의 질환은 대체로 '만성화' 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으로 몰리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제한적인 보험체계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민영화로 진행되면서 그 지향이 "빈곤인구(여성, 농촌, 노인)를 되도록 병원과 진료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 속에서 피부양인으로서 여성의 지점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실 여성관련 질환이 대체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싼' 의료서비스로 맞물려있는 상황을 더욱 강화하며 건강권을 둘러싼 여성의 처지를 양극화하게 될 것이다.

4. 이제 시작하는 질문들, 그리고.

여성이 이 사회에서 처한 다양한 입장을 중심으로 건강권과의 연관을 살펴보았지만, 여성빈곤을 하나의 집단으로 하면 또다른 측면이 조명된다. 거대제약회사 길리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는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에이즈 백신 테노포비르(Tenofovir)를 960명의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뒤 HIV 감염율을 비교하려는 임상실험을 시도하려 했었다. 이런 시도는 2004년 당시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 카메

룬 등지에서도 행해졌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반대하는 WNU(Women's Network for Unity) 단체는 가난한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이 성공하더라도 자신들이 사먹을 수도 없는 값비싼 약이 될 실험에 동참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중국의 분유가 아이를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신자유주의 현실에서 거대기업들은 여성을, 빈곤여성을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빈곤의 문제가 현 시점에서 시장과 연결될 때, 우리는 제대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제약회사 화이자(pfizer)가 비아그라를 만든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를 떠올리게 한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료기술의 개선이 "의료적 필요"와 "라이프스타일" 중 어느 것을 위한 것인가? 이때 삶의 질은 누구의, 어떤 것인가? 사회적 재생산이 강조되는 중에 출산 당사자 여성보다 태어난 아기에겐 집중되는 사회적 관심에 착안하여 아이를 위한 모유가 부족한 여성을 위해 소에 인간유전인자를 결합하여 모유와 유사하게 만들어 병에 담아 판매하는 전략을 고민하는 로즐린바이오메드(Roslin Bio-Med) 같은 기업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삶의 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인가? 장기기증 우선순위에서 생계부양자 남성이 실직자나 주변부 인생보다 더 인정되며, 독신보다 기혼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선호되는 현실에서 인류의 건강한 삶의 질의 내용은 누구의, 어떤 것인지를 보다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점검되며 채워질수록 우리는 여성의, 인간의, 더 나아가 이 사회, 이 세상의 진정한 건강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 여성노동자, 여성환자, 빈곤여성들이 어떻게 관련되어있으며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찾아내어 저항의 운동을 연결하는 것 역시 이 연구공동체가 더불어 지속할 과제가 될 것이다. (끝)

기업 세계화와 건강, 그리고 경제위기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 AIG의 파산과 의료민영화

세계적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가 사실상 '국유화'되었다. 파산위기에 놓인 AIG를 미국정부가 850억불을 투자 주식의 약 79.9%에 해당하는 주식에 지배권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AIG가 어떤 회사인가? 전세계 130개국에 진출해있는 부동의 세계 1위 보험회사이며 한국에서도 1,000만건 이상의 생명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등의 계약건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AIG"로 다른 설명이 필요없는 회사다. 단일 민영의료보험상품으로는 수년간 가장 많이 팔린 "다보장보험" 상품을 한국에서 팔고 있는 회사이다.

표 3 세계 보험회사의 규모별 순위

순위	그룹명	본거지 시장	세계점유율 (%. 1998)	수입보험료 (억 달러, 2004)	세계 시장점유율 (%. 2004)
1	AIG	미국	1.8	668	3.6
2	Metropolitan Life	미국	2.4	587	3.2
3	AXA	프랑스	3.3	584	3.2
4	Allianz	독일	1.8	562	3.0
5	ING	네덜란드	1.5	460	2.5
6	Generali	이탈리아	1.7	459	2.5
7	Nippon Life	일본	3.8	455	2.5
8	Aegon	베네룩스	1.7	421	2.3
9	Aviva	영국	0.9	376	2.0
10	Great Western Life	캐나다	1.5	341	1.8
11	Manulife	캐나다	0.8	318	1.7
12	Dai-ichi	일본	2.6	303	1.6
13	Prudential(UK)	영국	1.4	300	1.6
14	Meiji	일본	1.7	292	1.6
15	Prudential(US)	미국	1.3	278	1.5
16	Hartford	미국	1.2	268	1.5
17	Sumitomo	일본	2.2	238	1.3
18	CNP	프랑스	1.3	238	1.3
19	New York Life	미국	0.9	228	1.2
20	Credit Agricole	프랑스	0.5	194	1.0
21	Zurich	스위스	1.2	193	1.0
22	Principal Life	미국	1.1	188	1.0

주: 음영처리가 된 생명보험그룹은 주로 국내시장의 영업에 주력하고 있어 글로벌 보험회사로 평가되지 않음.

그런데 이런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하다니... AIG는 한국 법률에 의해 기존보험금이 보장된다고 열심히 선전을 하였지만 파산한 회사에 새로 가입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AIG는 2년에 결국 정리 과정을 거칠 것³⁸⁾"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듯이 보인다.

전세계 1위의 보험회사가 파산을 했다?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묻는다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다른 보험회사는 괜찮을까라는 질문이다. 메트라이프는? 알리안츠나 프루덴셜³⁹⁾은 괜찮을까? 그리고 저렇게 큰 규모인 AIG가 파산하는 마당에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어떨까? 삼성생명이나 교보에 계속 민영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실제로 AIG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있을 후 전 세계의 수많은 보험회사들은 해약문의전화를 받아야했고 중국정부는 보험보장법을 시급히 통과시켰다.

더 근본적인 깨달음은 보험회사들도 결국 금융회사일 뿐이며 돈을 벌이를 벌이는 투기꾼들에 다름 아니고 언제든 망할 수 있는 기업체일 뿐이라는 점이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AIG와 베어스턴즈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9개 은행의 부분적 국유화의 일련의 과정은 금융기관의 취약함과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어떤가? 이러한 전세계 경제위기나 금융공황과는 무관하게 은행의 재국유화는 커녕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한 은행민영화를 중단하겠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AIG 사태이후에도 한국 보험회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의료보장을 민영의료보험에 더 많이 책임을 맡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민영의료보험활성화 정책을 이 시기에도 여전히 추진 중이고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기관 채권발행법을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도 계속 늘리겠다고 한다.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투기꾼들과 돈놀이 장사꾼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질문에 한국정부는 안심할 수 있는 답을 주기는커녕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38) 블룸버그 통신, "2년 뒤 에이아이지가 대부분의 자산을 매각한 소규모 기업으로 남을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유지될지 알 수 없다". 2008.9.17

39) Swiss Re, "Getting together: Globals take the lead in life insurance M&A", SIGMA, No.1, 2006, p. 18.

2. 한미 FTA와 특허, 의약품 접근권, 경제위기

1980년대 대처-레이건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의 극대화과 이에 방해되는 모든 사회정책의 폐기,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한 국가 재정지출의 축소가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졌다. 이와 더불어 NAFTA, WTO의 성립을 거치면서 특허는 모든 동식물과 미생물로 확대되었고 그 기간은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연장되었다. 당장 문제가 된 것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이다. 강제특허실시나 병행수입 등의 보완조치가 나중에 수혜처럼 문서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국 국민에게 싼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으로 번번히 좌절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IDS 치료제를 싸게 공급하려는 시도는 36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집단소송(프레토리아 소송)에 직면해야 했으며 브라질, 태국 등 모든 정부의 시도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집요한 방해로 당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이들은 특허기간을 줄이거나 약가를 깎으면 신약개발에 대한 R&D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신약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다른 분야 기업체들이 매출대비 3-4%의 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제약회사들은 13%-18%의 이윤을 남겼다. 포춘 500대 기업 중 490개의 순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10개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순이익이 많은 상황이다(2002). 그들은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액의 35%를 쓰고 의약품 하나에 코카콜라보다 많은 광고비용을 지출한다. 이 비용만 줄여도 R&D 비용이 줄어들지는 없다. 더욱이 그들이 주장하는 R&D 비용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어있다. 세금면제비용임에도 세금을 포함한 비용으로 계산하고 직접 투자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R&D 비용을 계산하며 개발에 실패한 약에 투입된 비용까지 R&D 비용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실제로는 마케팅비용으로 계산해야 할 돈까지 연구개발기금에 합산한다. 바로 이런 내용을 폭로했다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 편집장에서 사퇴해야 했던 마르시아 앤젤(Marcia Angell)은 이들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개발연구기금은 늘어날 수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연구개발비는 10배이상 과장되어있다고 말한다⁴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기존 의약품보다 효능이 낫다고 증명된 신약을 개발하

40) 마르시아 앤젤, "제약회사는 우리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가는가" "The truth of Drug Company" 2004

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FDA에서 2002년 승인한 신약 87개 가운데 임상적으로 과거의 약보다 효과가 있다고 판정된 약은 단지 7개 즉 8%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의약품 하나로 1년에 1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던(예를 들어 화이자의 리피토는 1년에 13조원) 이른바 블록버스터 약이 특허가 만료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선택한 길은 바로 특허와 독점권을 온갖 구실을 붙여 더 연장하고 각국 정부가 필요한 약만을 정해서 사들이는 정책(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약가 적정화 방안, 오스트레일리아의 PBS)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행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WTO 협정의 강화이고 또 FTA이다.

이미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한해에 200조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약이 없어 죽는 환자들만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다. 한국과 같은 제 3세계에서 벗어난 국가에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정부비용이 매년 13.5%씩 상승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한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을 자연증가분 이외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아 사실상 삭감했다. 여기에 경제위기가 닥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약값을 인상 시킬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의약품 하나만으로도 정신 나간 짓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무덤이라 불렀던 강력한 의약품약가 억제정책인 PBS를 가지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미-오스트레일리아 FTA가 체결된 이후 이 PBS의 가장 중요한 원칙, 즉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결정한다는 원칙이 일부 약은 시장가격으로 일부 약은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으로 정한다는 형태로 법이 바뀌었다. PBS의 붕괴다. 이 "시장가격 market-driven price"은 미국의 경우 현재 한국 약가의 3배이고 선진7개국 약가는 한국약가의 2배이다. 복지재정은 삭감하고 의약품 가격은 올리면 결국 약을 두고도 이를 못 먹는 사람이 생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었고 또한 이명박 정부의 현재 정책이다.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은 물론 의약품 하나만이 아니다. 기업의 이윤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회정책을 무력화시킬 서비스산업의 네거티브리스트 도입, 래치조항, 투자자정부제소제도, 공기업 시장원리관철 등이 한미 FTA의 원칙이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것이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다시 금지할 수 없다. 민영의료보험의 모든 규제가 해제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미 FTA를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논리대로 수출을 위한 한미 FTA라는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한미 FTA의 목적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다. 앞으로 극도로 위축될 미국시장에 무엇을 더 팔겠다고 한국의 사회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산업을 고사시키려는 것일까? 버락 오바마가 '미국자동차는 한국에 수천대 팔리는데 한국자동차는 미국에 수십만대가 팔린다'고 말하면서 한미 FTA 협정의 내용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급하다고 이를 통과시키려는 것인가? 다른 설명은 그만두자. 한미 FTA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기필코 지켜야만 할 외환송금 제한 권리를 제한한다. 제 2의 IMF를 자초하는 것이 한미 FTA다.

3. 식품안전과 기업세계화

춧불정국의 도화선이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광우병 문제가 기업의 이윤추구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광우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문제는 자본의 이윤추구가 극도로 심화된 1980년대 이후 전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

영국에서의 광우병 발생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학계의 대응은 왜 광우병이 발생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첫째 1980년대 대처의 집권 이후 영국의 식품안전정책은 식품안전위주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했다.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이후 영국의 사료정책의 변화이다. 영국의 1980년대의 사료정책은 보다 싼 고기단백질로의 변화를 허용하고 동물성단백질의 처리공정의 규제를 완화했다⁴¹⁾. 사료정책의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0년대 명백히 강화된 회전문 현상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변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정부 보고서에서도 지적될 정도다. 이 보고서에서 필립스(Lord Phillips of Worth Matravers)는 영국정부의 과학자문위원이었던 김벌린을 비판한다. 김벌린은 1988년 사우스우드 경을 대표로 한 영국정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해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다. "김벌린 박사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증거물을 제출했을 당시, 그는 소의 부속물을 제품에 계속 넣을지 고민하고 있던 애완동물사료업체(페디그리, Pedigree)의 자문위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듬해 5월, 프리온 관련 질병의 권위자인 김벌린 박사의 조언에 따라 페디그리는

41) 영국정부 조사기록 BSE inquiry www.bseinquiry.gov.uk. 흔히 필립스 보고서로 일컬어진다.

자사 제품인 애완동물 사료에서 소와 관련된 물질들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특히 페디그리는 영국산 소의 척수를 포함하고있을 수 있는 일부 척추골·비장의 구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1995년 8월까지도 이런 식품제한조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도입되지 않았다. 영국 중앙수의원은 1993년까지 광우병 발병을 비밀에 붙였다.

둘째 신자유주의로 인해 영국에서 과학연구에 의한 연구비 지원이 삭감되었다. 이 결과 대학이나 정부에 의한 과학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연구들이 기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육류연구소와 국가낙농업연구소가 폐쇄됐다. 대처는 국가가 개입해 온 영역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전에는 정부 재정 지원 덕분에 그 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정치인·산업계 인사들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많은 연구소들이 폐쇄되었고 살아남은 연구소들은 기업들의 연구비지원에 의존해야 했다.

셋째 비판적인 과학자들의 경고가 무시되었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기업에게 유리한 대응을 지속했다. 지금도 "검머스럽다"는 형용사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존 검머의 대응이 대표적이다. 과학자들의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레이시교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리즈 대학교의 레이시 교수는 자기 주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부단하게 노력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자 동료 연구자들은 레이시가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레이시는 여론과 일부 언론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정부와 식품 산업은 '대중적 히스테리'와 '과학적 보수주의'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광우병 위험에 진지하게 대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런 일이었다. 심지어 같은 대학교의 연구자들도 레이시를 공격했는데, 레이시의 발언으로 기업들이 대학연구비 지원을 삭감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레이시 교수가 있는 리즈 대학교의 임상 미생물학과는 문을 닫았고 레이시는 퇴임했다. 주된 원인은 농림어업식품부·보건부와 손잡은 식품 산업계의 로비였다⁴²⁾.

푸스타이 교수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경우이다. 정부지원에 의한 GMO 연구를 하던 그도 그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기업에 의한 연구비지원 삭감을 우려한 동료들에 의면과 비판에 의해 결국 과학계에서 사실상 추방당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전예방의 법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실종된다는 점이다. 사전예방의 법칙은 "위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42) 포베이, 같은 글

근거가 부족하다해도 그 결과가 되돌이킬 수 없거나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낳을 경우 사전적으로 위해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조치를 내리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보건이나 환경영역에서 학문이나 원칙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 원칙은 WTO 협정의 발효로 결정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였으며 각국의 검역이나 위생, 환경분야에서의 독자적인 사전예방적 법률의 적용이 국제협약 위반이나 산업발전에 장애물이라는 명목으로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극대화, 신자유주의가 이제 보건 및 환경영역의 기본원칙까지 침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식품안전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은 물론 영국보다 미국이 더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거대농식품기업을 볼 때 미국을 자신의 국적으로 하는 카길, 아처다니엘미들랜드(ADM), 타이슨푸드, 콘아그라-스위프트, 월마트, 맥도날드 등이 영국의 네슬레나 유니레버, 세인스베리 등보다 더 규모가 크고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그러하다.

회전문 인사로 볼 때 미국의 농무부 인사들은 사실 미국 거대 농식품 기업출신인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몇 개의 예만 들어보자. 조앤 스미스는 1985년에 부회장을 거쳐 전국목장주연합(National Cattleman's Association)을 회장을 지냈다. 1986년 스미스는 미국쇠고기 협회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1989년 조앤스미스는 미농무부 마케팅 및 서비스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다. 스미스가 처음으로 한 일은 NCA 요청에 따라 쇠고기 검사과정에서 다듬고 남은 조각과 연골을 고기라는 라벨을 붙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쇠고기업체들은 소 한 마리당 7달러를 더 벌게 되었다. NCA는 1985년 '육우 권장과 조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연 예산 6000만 달러를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이익단체가 되었다. 연 8500만 달러에 이르는 이 준조세 중 약 6000만 달러를 미국 축산육우협회가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이 법률의 골자였다.

그런데 이 법률은 누가 통과시켰는가? 레이건이 임명한 농무부장관 존 블록, 리차드링 차관보, 역시 차관보 윌리엄 맥밀란 등은 모두 미국정육협회, NCA의 회장과 부회장 출신이었다. 그리고 조앤스미스가 NCA의 부회장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WTO 농업협정이나 식품위생협정 자체가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WTO 농업협정의 초안을 작성한 덴 암스투츠는 당시 카길 부회장이었고 최근에는 이라크 미군정의 농무부장관을 지냈다.

WTO가 성립한 이후 전세계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곳은 세계보건

기구가 아니라 세계무역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세계무역기구는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건강이나 위생검역을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데 장애로 인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기구이다. WTO가 건강과 관련하여 쓰는 1년 예산이 WHO의 1년 예산의 10배이다.

미국의 레이건 집권 이후 노골화된 거대농식품위주의 정책과 규제완화, 즉 식품안전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주당, 즉 빌 클린턴이 집권한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았다. NAFTA를 출범시키고 WTO를 출범시킨 대통령은 다름아닌 빌 클린턴이었다. 1996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은 새로운 미농무부 식육검사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식품안전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과정에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밝히고 세균테스트와 같은 증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매우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정부가 할 식품검사를 기업이 대신하고 오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염의 정도를 정하는 규제완화정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국정부는 도축장에 파견된 식품검사관의 수를 1000명 감원하였고 오염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샘플의 오염범위를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검역의 민영화"가 보다 진전되었으며 이 조치가 도입된 이후 미국에서 O-157 등의 식중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WTO의 출범은 또한 GMO의 이윤동기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의약품문제로 다룬 특허문제는 GMO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식물, 미생물까지도 확대된 특허권은 GMO 종자와 동물 생산으로 인한 이윤을 확고히 보장해주었다. 이른바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는 불임종자개발에 이르게 된 것은 이들이 GMO 종자에 대한 독점권을 생물학적 차원에까지 확대하려는 자본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특허와 독점권 강화는 과학의 발전을 돕기는커녕 생산력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GMO 자체가 자연상태에서 안정적이지 않아 농업생산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미생물이나 과학기술과 그 산물에 대한 독점권의 강화는 실험실까지 영향을 미쳐 전세계에서 미국정부가 특허에 대해 강제특허실시를 가장 많이 한 정부가 되었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특허가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만일 1989년 보수당 정부가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를 다룰 때처럼 광우병을 다뤘다면, 가축 도축 정책만으로도 인간의 먹이 사슬에서 비롯한 병들을 근절했을 것이다. 또한 다른 모든 광우병 발생국들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모든 위험소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제거를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고 광우병검사를 0.05%만 시행하고 SRM제거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점만 지적하도록 하자. 결국 광우병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조류독감의 문제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들은 애꿎은 철새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조류독감의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세계 가금류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단일품종화로 인해 가금류들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견해이다. 또한 더 문제는 이 조류독감의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오셀타미비어)의 특허권자 및 생산업체인 길리어드와 로슈가 U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고수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인구의 20% 분량의 타미플루 보유량을 채우는 것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수천만에서 수억명의 사망가지도 경고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경고속에서도 로슈는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로슈의 생산량으로는 2020년이 되어서야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을 생산할 수 있다. 로슈와 길리어드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고 타미플루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들의 사재기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WTO의 위생검역협정(SPS),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 투자협정, 서비스협정을 비롯하여 GMO 표기를 막는 TBT 협정 등 모든 협정들, 즉 WTO 자체가 인류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4. 기후변화와 건강

부시대통령이 석유중독증을 말하는 것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성장을 말할 정도이니 이제 에너지 문제나 기후온난화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근본적인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시나 매케인은 대체연료로 알콜이나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하고 중동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안석유개발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녹색성장이라고 믿는 듯이 보

이고 대운하사업도 녹색성장에 포함시키지 않을지 두렵다. G8에서 항상 지구온난화문제가 다루어지지만 아무도 그들이 진지한 발언을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당장 5년 안에 북극항로가 열린다는 예상이나 북극의 여름 빙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방글라데시나 카리브해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부의 주들에서도 기후난민들이 매년 발생한다. 지구온난화가 해수면의 상승이나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한파나 기근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정신나간 환경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이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기후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7월 기후변화로 매년 15만명이 더 사망하고 매년 500만 명이 더 질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⁴³⁾.

이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첫째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질병들, 즉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 그리고 이로인한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 등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유럽의 이상고온현상의 결과 냉방시설이나 치료시설이 가장 잘 완비되어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에서 전년보다 27,000명이 더 사망하였다. 또 스모그 현상도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많이 발생한다. 뉴욕시를 예를 들면 스모그로 인한 사망률이 1990년대 보다 현재 5%가 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폭우,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재해다. 1990년대만 이러한 기상재해로 60 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9년 10월 인도 오리사 지방에서의 싸이클론으로 15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만명이 사망했다. 1999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의 홍수는 3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한 2005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허리케인 시즌동안, 허리케인이 25개나 발생하여 21개의 영어이름을 모두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처음으로 그리스 알파벳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등장시켜야 할 정도였다. 사망자와 실종자수가 미국에서만 8000여명이었고 과테말라에서는 한마을 주민 전체 3000여명이 매몰되어 마을이 공동묘지로 변했다. 미국에서만 7만명이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올해의 미국에서의 대피소동에서 보이듯이 이제는 연례

43) 네이처 2005년 11월 17일

행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허리케인과 홍수 등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후 변화에 대해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와 남미 대서양, 인도 해안,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는 기후민감질병의 증가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기후민감질병(climate sensitive diseases)인 설사, 말라리아와 이로 인한 영양실조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질병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의 가난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폭우가 빈번해져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워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온상승, 폭우가 농산물생산을 감소시켜 사람들의 영양실조를 불러일으키며 사막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 이 세가지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2년에 330만 명이며 이중 아프리카의 인구가 30%를 차지한다.

영국정부의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매년 5,000명의 암이 더 발생하고 2,000명의 백내장이 더 생기고 있다고 보고한다.

물론 이러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여러가지 위협말고도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재앙적 피해는 바로 해수면의 상승이다. 보수적인 보고서인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도 앞으로 100년간 9cm-88cm까지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영국정부의 공식보고는 해수면 상승이 2m이상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은 매년 갱신중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해안가에서 60km이내에 살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부산대와 기상청이 예상한 바에 의하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해수면이 16-30cm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한세기동안 한반도의 온도상승은 약 4.6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지대의 침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말레이시아는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해안지대의 침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투발루 주민들의 호소는 당장의 문제이며 이집트의 나일강지역이나 방글라데시의 갠지스강 유역, 몰디브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살 땅이 사라지는 일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후변화와 이른바 지구온난화는 석유회사와 자동차기업 등 환경오염기업과 이를 비호하는 세계 각국의 정부

들이 방비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최소 60-80%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해도 기후변화의 추세는 계속되다가 2050년에야 현재 추세가 꺾이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교토의정서는 5%의 감축량을 배정하고 이 감축량조차 사고파는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토의정서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고 이러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뒷받침 하는 것은 세계의 자동차기업들과 석유기업들이 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태기후변화협의회를 만들기 까지 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호주(석탄 제 1위 생산국가),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 중국 정부 등과 참여하고 있다.

세브론의 대표이사였던 토마스 데어(T. Derr)는 1988년 "이라크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라크에 접근하는 것에 전략적 이익이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99년까지 세브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 사람은 2001년부터 헬리버튼의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라크에서의 자기 예언을 실현하였다. 그리고 세브론의 전직이사가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이고 헬리버튼은 덕체니의 회사이다. 기후변화와 기후온난화를 초래한 자들이 바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5. 전쟁과 인류의 미래

경제위기의 시기에 또 하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일은 바로 다름 아닌 전쟁이다. 1929년 세계 공황 시기 우리는 이 공황이 뉴딜정책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공황은 제국주의 열강들간의 생존을 위한 전쟁을 불러왔고 결국 이것이 제 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으며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미 그루지아에서는 러시아와 미국간의 지정학적 패권과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크림반도와 흑해전체의 긴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라크전쟁이 이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전쟁은 동전의 양면이며 전쟁과 기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괴물의 두개의 머리다. 가까이만 보아도 1980년대 벌어졌던 제 3세계에서의 수많은 유혈내전과 이후 1차 걸프전쟁, 코소보내전, 대테러전쟁 선포 이후 벌어졌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단의 공습, 이라크 침공, 소말리아와 예멘의 내전, 그

의 체첸전쟁, 아체지역에서의 내전, 아프리카에서의 끊임없는 내전 등 전쟁은 소리없는 세계대전은 지역적으로 계속되어왔다.

당장 이라크전쟁만 보자. 작년 노무현 정부는 4번째 파병연장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에너지 공급원인 중동정세의 안정', 그리고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을 위해 파병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평화와 재건을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의 압제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는 것을 이라크 침공과 점령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상황은 후세인 집권 시기보다 훨씬 악화됐다. 절대빈곤의 지표로 흔히 쓰이는 하루 1달러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라크 2700만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800만이다. 50만 명 이상의 바그다드 주민들이 하루에 2~3시간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전쟁 전에는 하루에 수도를 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던 이라크인들이 지금은 하루에 3시간밖에 쓰지 못한다⁴⁴⁾ 이라크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 80만 명이 전쟁과 납치 등의 공포로 학교에 가지 못한다. 초등학교생의 22.2%에 해당한다⁴⁵⁾.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굶고 병들어 죽는다. 한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가장명확한 지표는 '5세미만 어린이 사망률'이다. 미국은 2003년 점령 이후 이라크 5세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침공 후 영아사망률은 후세인 시절보다 더 악화되어 2006년 1000명당 130명으로 증가했다. 5살이 되기전까지 아이들 100명중 13명이 죽는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수치는 에이즈가 가장 극심한 아프리카의보츠와나 수준이다⁴⁶⁾. 유니세프의 다른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의 10%가 급성영양실조이고 25%가 만성영양실조이다. 즉 10명중 1명은 당장의 끼니가 문제이고, 4명 중 한명은 만성적으로 굶는다. 이 수치는 후세인 통치 시절의 두 배가 넘는다.

이라크 심리학회는 18개 지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조사 대상 중 92%가 폭탄에 의해 사망할 수있으며, 60%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학회는 또 이라크 전역에 걸쳐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도 조사를했는

44) IRIN,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2007. 1. 28

45) Save the children, "Rewritethe future, Education for children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2006. 9

46) UNICEF, "The State of World's Children" 2007

데 92%가 학습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⁴⁷⁾.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발간하는 의학저널 <랜싯>(Lancet)은 2006년 10월 발표된 논문에서 2003년 미군 침공 이후 약 40개월 동안 전쟁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로 65만 5000명이 더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1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이 사망자 수는 이라크 전체인구의 2.5%이다. 이 수치가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면 어린이들의 죽음을 보라. 'Save the Children'은 2005년 한해에만 5세미만 어린이들 중 12만 2000명이 죽었다고 보고했다.

유엔의 경제제재시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0년 경제봉쇄조치로 인해 어린이들이 10년동안 6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 즉 한달에 5000명의 어린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엔의 경제봉쇄가 얼마나 비인도적인 조치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전쟁은 그 때에도 계속되었고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금은 한달에 1만명 씩 죽는다.

30%가 설사와 폐렴에 의한 사망이다. 이라크어린이들 중 35%만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는 상황에서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나머지 70%는 폭탄과 총, 일상적으로 만연한 폭력으로 죽는다. 한국의 아동사망률의 22배에 달한다⁴⁸⁾.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이라크를 '기름밭'이라 불렀다. 지금 한국정부가 쿠르트 자치정부와 석유계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 정부 그리고 다국적 석유메이저기업들이 노리는 것은 세계의 패권과 바로 이 석유다. 신석유법은 알려진 석유생산지 중 60곳 이상과 미개발된 이라크 석유매장량 2/3를 대상으로 석유생산은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50년까지의 장기계약으로 생산된 석유를 외국기업과 분배해야 하고, 정부가 앞으로 외국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것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 석유법 통과를 노리고 최근 이라크에서는 석유 엑스포가 열렸고 이제 다국적 기업들과 각국 정부는 전쟁의 직접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 기름밭에 사는 이라크 사람들이 전기와 전기로 생산하는 깨끗한 물이 없어 병들고 죽어가는 동안에 말이다.

석유기업 들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때돈을 벌어들인 기업들은 물론 방위산업들 즉 무기상들이기도 하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보잉, 록히드마틴, 헬리버튼 등과 같은 무기상들이 이라크 전쟁으로 석유산업과 함께 때돈을 벌어들

47)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06. 11. 15

48) Save the Children, 'State of the World's Mothers', 2007.5.8

였다. IPS(Institute for polycystudy와 UFE(United for fair economy)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 국방부의 2005년 방위산업체 계약액은 2690억 달러로, 2001년의 15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고, 그 결과 34개 방위산업체의순이익은 18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이라크 재건사업을 담당했던 기업들도 이라크에서 큰 이윤을 남겼다. 파슨스나 벡텔 등이 그렇다. 한 가지 예만 살펴보자. 미국정부는 2003년 이후 이라크 보건 의료시설을 재건하는데 10억 달러(1조 원)를 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결과 이라크에서 병원이 새로 지어진 것은 단 한 곳도 6개의 지역 보건소가 새로 지어졌을 뿐이다. 180개의 이라크 병원 중 90% 이상이 필수 의료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수익(링거액)이 없고 단순장비가 없어서 환자들이 죽는다⁴⁹⁾.

한국 정부 또한 이라크 파병에 지금까지 약 1조원을 들였다. 그러나 이 돈은 한국의 민중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돈이었으며 이라크 민중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라크에서 석유사업을 맺고 있는 일부기업들에게 돌아갈 쉬 있는 종자돈이었을 뿐이다. 이라크의 상황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에게 이라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석유와 기업의 진출을 위한 땅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기름밭일 뿐이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한국은 우리가 사는 땅위에서 그리고 한국군이 참가한 전쟁을 겪었다. 이제 경제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지전 및 보다 큰 규모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전쟁은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과 더불어 인간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두 주범 중 하나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과학기술과 인간의 소통의 매체가 발전할 수록 이 두 가지 재앙은 더욱 크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6.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과연 대안인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인간의 건강과 삶에 대한 재앙적 영향은 위에 언급한 것들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건강파괴도 더욱 심화되었다. 과거의 인체의 신체노동을 단위 분할하여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했던 자본은 이에

49) Corpwatch 2007년 1월8일자

더하여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심리학을 동원하여 인체의 신체리듬과 심리학적 감수성까지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강화된 노동강도와 노동감시 속에서 그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짜는 노동과정에 놓여있다. 다른 한편 제3세계에서의 기아공장의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의 거듭되는 다짐과 겉으로만의 노동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궐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아동노동 또한 전 세계의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간자체가 상품화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다. 멩겔레에 비유하는 것은 과학자들에 대한 최대의 모독으로 간주되지만 터스키기 연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임상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개발된 약과의 비교연구가 아니라 플라시보와 신약을 비교하는 식의 헬싱키선언에 명백히 위배되는 임상실험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도 황우석씨의 과학사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처벌을 받은 의학자는 한명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줄기세포 임상실험이 여전히 한국에서도 치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난자매매를 포함한 장기매매는 이제 전 세계적인 사업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현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인간의 상품화는 평범한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겠다는 최소한의 꿈을 빼앗아 가고 있으며 종종 이 노동착취와 인간신체의 상품화의 맨 앞자리에는 여성, 아동, 노인, 성소수자, 소수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와 주변인들이 서게 된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쟁과 기아, 평범한 사람들의 파산과 사회적 약자들의 파멸.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멋진 신세계'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 경제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며 지금의 체계를 보완하는 몇가지 조치만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의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금융문제만 해도 자본통합법, 방키슈랑스, 은행민영화를 그대로 추진하며 금산분리를 폐지하려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조치를 포기하려는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기업

선진화로 새 이름으로 단장된 공기업 민영화 혹은 사유화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며 사회복지예산의 축소, 부자들에게 대한 감세 정책 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 종언을 고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은행을 국유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신자유주의적 교리는 세계경제 붕괴의 위험 앞에 들어설 틈이 없어 보인다. 무려 1조원 가까운 구제금융이 동원되고 G8은 물론 G20의 정부들이 직접적 개입에 나서는, 신자유주의 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을 벌이고 있어도 한번 구르기 시작한 파멸로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각국정부들 수뇌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내놓는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기관들과 억만장자인 투자자들의 구제이지 그로 인해 피해를 볼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구제가 아니다. 사실상의 국유화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이들이 관심을 쏟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노동 없이 거금을 챙겨온 자산가들의 주식가치의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다. 결국 공적 구제라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산가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타개이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타개가 아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진정한 위기의 본질은 이 경제위기가 케인즈주의의 파산에 이은 해결책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가 파산했다는 것에 있다. 즉 신자유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의 파산으로 다시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현재의 문제는 자본의 이윤추구가 노동자들과 서민들에 대한 양보를 전제로 하는 케인즈주의 체계로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렇게 해서 인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이윤을 극한까지 추구해왔던 신자유주의조차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대안을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로만 한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한 해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정부들과 기업가들은 당황함속에서도 여전히 말한다. 이 체제만이 대안이고 이 혼란은 고통분담 속에서 지나갈 것이라고. 문제를 지도자들에게 맡겨놓고 견디면 다시 세계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고통분담이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전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그렇게 해서 돌아올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계가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연구하고 활동하여야 할 것은 자본주의로 우리의 대안을 한정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만으로는 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가 실패한 이른바 '스탈린식 사회주의' 때문에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은 무수한 대안이다. 이 체제외에 대안이 없다(TINA)라는, 더 이상 작동하지도 않는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들은 이제 대중들에게 설득력도 없다. 우리가 꿈꿀 세계는 이윤보다는 생명, 이윤보다는 건강, 이윤보다는 인간이 가치가 되는 세계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대안을 꿈꾼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대안도 가능하지 않다고 모든 대안을 억누른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모든 대안의 논의는 금기시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시대적 전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동시에 우리의 머릿속에 놓여있는 금기들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촛불의 바다에서 보여주었던 대중들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때 우리가 도달할 그 대안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끝)

창립총회 순서

- 개회사
- 민중의례
- 연구공동체 경과보고
- 축사
- 정관 심의
- 대표 및 감사 선출
- 부대표 및 편집기획위원장 임명
- 사업계획 심의
- 창립취지문 낭독
- 폐회사
- 광고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창립 경과 보고

1. 초기 논의 단계

- 2006년 하반기부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과제와 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조직에 대한 논의 시작
- 2007년 3월 10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정책기획단 회의시에 일단의 문제의식을 담은 “보건의료운동 진영 연구센터 설립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라는 이름의 문건 제출
- 2007년 6월 16일 연구센터 창립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회의 진행
 - 씨앗회원을 모집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을 준비하기로 결정함
- 2007년 7월 14일 2차 준비 모임 회의 진행
 - 씨앗회원 및 준비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서두르지 말고 진행하기로 함
 - 창립에 앞서 준비회원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하기로 함
- 2007년 9월 9일 3차 준비 모임 진행
 - 서둘러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함
 - 연구센터의 명칭을 당분간 ‘건강연구공동체’로 명명하기로 함
- 2007년 9월 29일 4차 준비 모임 진행
 - 연내 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연구공동체의 조직 구성, 재정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함
 - 정기간행물 발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함
- 2007년 10월 20일 5차 준비 모임 진행
 - 씨앗회원 모집을 결의함
 - 의약품 접근권, 노동과건강, 환경과건강 영역의 연구 과제에 대해 검토함
- 2007년 11월 17일 6차 준비 모임 진행
 - 씨앗회원 모집을 위한 리플렛 마련하기로 함
 - 연구공동체 출범 일시를 대선과 총선 사이로 연기함
 - 여성과 건강, 인권과 건강 영역의 연구 과제에 대해 검토함

- 2008년 1월 12일 7차 준비 모임 진행
 - 리플렛 초안 검토
 - 2008년 사업계획 검토
- 2008년 1월 30일 종로구 와룡동 동원빌딩 206호에 사무실 마련
 - 건강연구공동체 명의의 활동 시작

2. 준비 모임의 워크샵

- 1차 : 2007년 9월 9일 “건강 연구의 영역과 과제”
- 2차 : 2007년 9월 29일 “건강연구공동체의 활동 과제의 역할”
- 3차 : 2007년 10월 20일 “보편 건강의 개념과 우리 운동에 대한 합의”

3. 건강연구공동체 시기의 활동

- 본격적으로 씨앗회원 모집 시작
- 씨앗회원을 중심으로 회원 전체 월례 토론회 모임 진행
- 편집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운영과 간행물 발간에 대한 집행 계획 등을 심의
- 세계화와 건강에 대한 소그룹 토론회 모임 진행
- 당분간 임의단체로 활동을 지속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함
- 2008년 6월 13일 “건강 연구의 빈 공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수돌, 고정갑희, 조효제 교수와 더불어 좌담회를 진행함
- 2008년 7월 29일 명칭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으로 개칭

4.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활동

- 2008년 8월 29일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와 함께 2008년 한국사회포럼에서 “반신자유주의운동과 식품안전운동” 토론회 공동 주최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관(안)

2008년 10월 18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그 명칭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하 연구공동체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연구공동체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1. 이 연구공동체는 전인류의 건강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는 건강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히 본 연구공동체는 세계화 등 새로운 사회 현상에 따른 건강 문제, 전지구적 건강 문제, 건강불평등 등에 대한 연구 영역에 집중하고, 다학제간 통합 연구를 지향한다.

제 4 조 (사업)

이 연구공동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국민여론의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와 교육, 출판 등의 사업
2. 건강사회의 모형개발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연구
3.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물, 정기간행물 간행 및 홍보사업
4.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5. 건강사회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나라 단체와의 국제 연대
6. 기타 연구공동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공동체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자료회원 등으로 한다.
3. 후원회원과 자료회원은 이 연구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 나. 의결권
- 다. 본 연구공동체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본 연구공동체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3.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할 경우, 편집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연구공동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본 연구공동체의 소속지부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9 조 (징계)

1. 본 연구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회칙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본 연구공동체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다.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라. 그 밖에 임원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편집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과 관련 직책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공동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 1명
- 나. 부대표 2명
- 다. 감사 1명
- 라. 편집기획위원장 1명

제 11 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 공직에 있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3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대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부대표, 편집기획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2.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대표와 부대표의 임무)

1. 대표는 본 연구공동체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부대표가 대행한다.

제 15 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공동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공동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 또는 총회, 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편집기획위원장의 임무)

편집기획위원장은 대표의 감독하에 연구공동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7 조 (명예대표)

1. 명예대표는 본 연구공동체 역대 대표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대표는 임원 및 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에 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8 조 (고문)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9 조 (자문위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20 조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21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발송하여 소집한다.

제 22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5 장 임 원 회

제 24 조 (총회의 제척사유)

대표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대표 또는 임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5 조 (지위와 구성)

1. 임원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집행기구이다.
2. 임원회는 대표와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26 조 (소집과 의결)

1. 정기임원회는 대표가 6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임원회는 대표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7 조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결산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주소지 변경 의결
7. 정관 변경 심의
8.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재개정
9. 회원의 징계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지부의 창설 및 승인
12.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13. 기타 대표가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6 장 연구조직과 위원회

제 28 조 (연구원)

1. 본 연구공동체의 연구 사업을 위하여 본 연구공동체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연구원을 임명한다.
2. 연구원의 편제, 임무, 자격, 노동조건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연구위원 위촉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

1. 대표는 연구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기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성)

1.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단체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대표가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임원회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임원회 및 총회의 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예산의 결산)

1. 대표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임원회의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본 연구공동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해산)

본 연구공동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공동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 개정)

연구공동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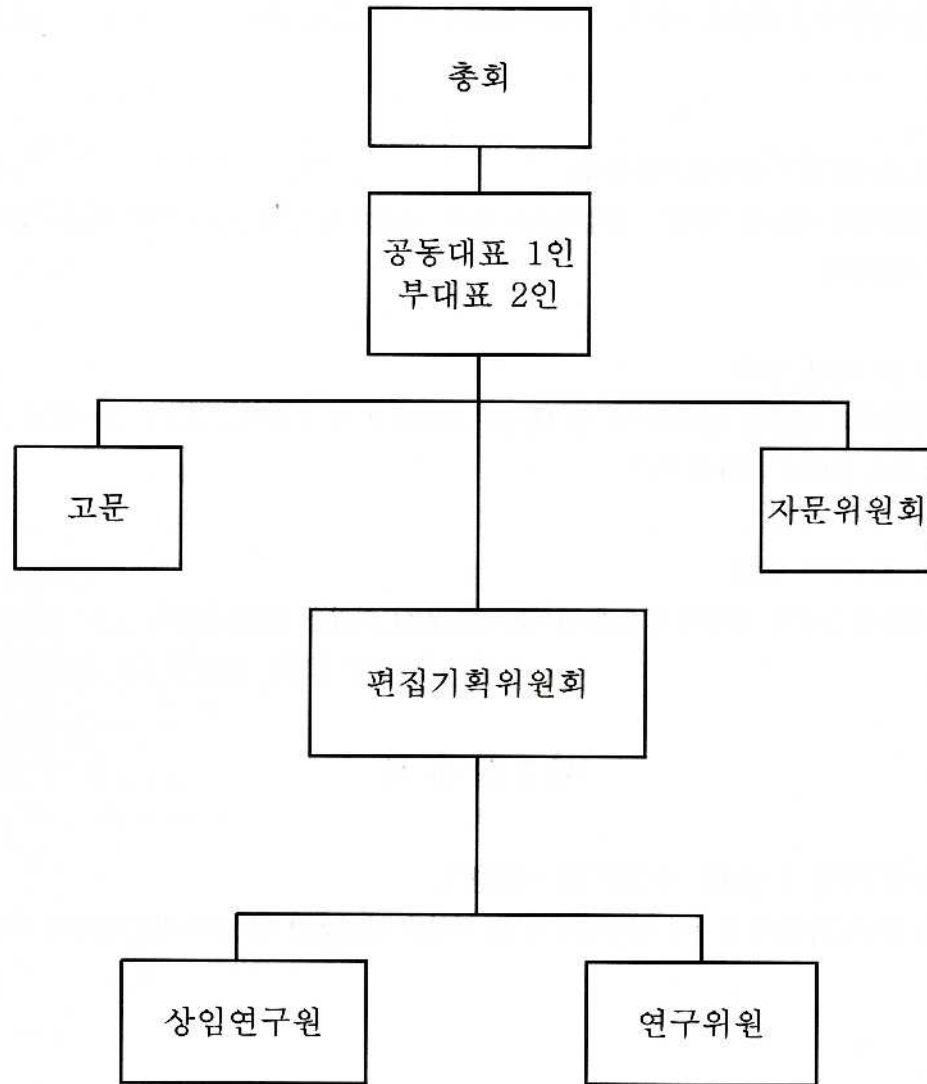
제 38 조 (규칙 제정)

연구공동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임원회의의 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부 칙

1. 본 연구공동체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공동체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조직 체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09년 사업 계획안

사업계획 총괄표

월	연구		출판		토론회		
	기획연구	외부 프로젝트	기획출판	정기 간행물	대토론	주제별	
1월	세계화, 자유무역, 사유화와 건강						
2월							
3월			기획번역	봄호			
4월							
5월							
6월				여름호	기획연구 발표회		
7월	건강 정책의 전환 모색 - 보편 건강을 위하여 (가제)	주관 프로젝트 1개	기획 연구1				
8월						토론회	
9월		연구원 참여 프로젝트 2개		가을호			
10월						토론회	
11월							
12월			기획 연구2	겨울호	기획연구 발표회		

연구 계획안

가. 세계화, 자유무역, 사유화와 건강 (가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WTO체제 이후 FTA 국면을 경과하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 질서가 전세계를 관통하고 있음
-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를 풍미하면서 공공부문 사유화의 물결도 거셉
- 이와 같은 세계화, 자유무역, 사유화의 경향은 민중의 삶뿐 아니라 민중의 건강에도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끼침
- 세계화, 자유무역, 사유화에 따른 건강 문제는 향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음
- 한미FTA 투쟁 국면을 거치면서 의약품 지적재산권 문제, 광우병 문제 등은 이미 이와 관련된 주제로 적지 않은 논의를 거친 바 있음
- 이에 그간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절실함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WTO, FTA 체제와 국민의 건강

- WTO, FTA 체제의 역사와 의미
- WTO, FTA 체제와 식품 안전
- WTO, FTA 체제와 의약품 접근권
- WTO, FTA 체제가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 기타 WTO, FTA 체제와 민중의 건강 문제

나) 공공부문 사유화 경향이 민중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유화 경향에 대한 개괄
- 물 민영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네트워크 산업(전기, 가스, 철도 등) 사유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보건의료체계 사유화의 경향 -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 보건의료체계 사유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연구 방법 및 최종 연구 결과 도출 계획

- 연구 영역별 연구책임자 선정
- 연구책임자 주관하에 정기적인 세미나팀 운영
- 세미나팀의 세미나 결과를 총괄하여 연구책임자가 대표 집필

나. 건강 정책의 전환 모색 - 보편 건강을 위하여 (가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보건의료운동은 정책적으로는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등 의료 정책에 집중된 운동을, 운동의 주체면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혹은 관련 노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
- 이러한 운동의 과제와 주체는 여전히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와 주체로 남을 것은 명확함
- 그러나 한편으로 '건강'은 의료서비스의 평등한 공급만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이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정책이 함께 추구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 영역으로는 노동보건, 환경보건, 의약품 정책, 식품 정책, 여성과 건강, 인권과 건강 등이 포함됨
- 이러한 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는 그간 산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이지 못했고 현실 운동과의 접점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음
- 다른 한편으로 운동의 이념 및 철학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을 둘러싼 우리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철학적 분석과 모색이 부족한 현실임
- 이에 의료 정책에서 건강 정책으로, 보건의료 운동에서 보편건강 운동으로의 전환과 보편건강 운동의 이념적, 철학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보편건강 운동의 이념적, 철학적, 운동적 지평

- 국가 비전과 보편 건강
- 보편 건강 운동의 정치경제학
- 몸을 둘러싼 철학적 분투
- 건강과 관련된 운동의 조류

나) 노동 및 환경보건

- 임금 노동과 건강
- 자본주의와 환경
-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건강
- 지구온난화와 건강
- 반핵평화와 건강

다) 의약품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
- 의약품 생산과 판매의 정치경제학
- 임상시험과 인권

라) 식품

- 초국적 기업의 식품 생산 시스템과 건강
 - 식품 독점, 빈곤과 기아, 정경유착, GMO, 항생제, 농약 오남용 등
- 자유무역체제하의 식품 안전
 - WTO, FTA
- 자본주의적 식품 소비 시스템 비판
 - 패스트푸드, 육류 소비 등
- 식품 위생과 민중의 건강
 - 광우병, 조류독감, 식중독 등

마) 여성과 건강

○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

- 낙태, 출산, 피임 등

○ 폭력과 건강

- 가정 폭력, 성폭력

○ 여성 노동과 건강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젠더 관점

- 의학 연구, 의약품 생산,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남성 중심성 비판

바) 인권과 건강

- 건강 정보와 인권 - 건강 문제로 인한 차별 문제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건강
 - HIV감염인, 정신질환자, 성노동자, 구금시설인 등
- 인권 침해와 건강
 - 고문, 정치적 억압, 사회적 배제 등

3) 연구 방법 및 최종 연구 결과 도출 계획

- 연구 영역별 연구책임자 선정
- 연구책임자 주관하에 정기적인 세미나팀 운영
- 세미나팀의 세미나 결과를 총괄하여 연구책임자가 대표 집필

2. 외부 프로젝트 연구 계획안

가. 연구공동체 주관 외부 프로젝트

- 외부 기관 발주하는 외부 프로젝트 중 하나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

나. 상임연구원 참여 외부 프로젝트

- 연구공동체의 지향과 방향에 부합하는 외부 프로젝트에 상임연구원이 참여하여 공동 연구 수행 - 2과제 정도

출판 기획안

1. 기획 번역

- Pathology of Power
- What Every American should know about who's really running the world
- Private power, Public law
- Flat world big gap

2. 연구결과물 출판

- 기획연구 보고서 2권

3. 정기간행물

가. 계간지

- 편집위원회 총괄
- 기획 중심의 정책이론지

나. 월간 리포트

- 온라인 간행물
- 상임연구원 담당

다. 주간 정세 비평

- 온라인 간행물
- 상임연구원 담당
- 주간 건강 정책 동향에 대한 브리핑

토론회 계획안

1. 연구 발표회

- 6월과 12월에 기획연구 발표회 개최

2. 주제별 정기 토론회

- 8월 - 주제 미정
- 10월 - 주제 미정

세미나 및 워크숍 계획안

1. 연구주제별 정기 세미나

- 회원들을 중심으로 연구주제별 정기 세미나 진행

2. 기획 워크숍

- 몇 가지 기획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인 워크숍 진행

대차대조표

(2008년 10월 16일 기준)

(단위 : 원)

자산			부채		
항목	금액	백분율	항목	금액	백분율
유동자산	7,191,700	39.5%			
사무실보증금	8,000,000	44.0%			
후원 약정	3,000,000	16.5%			
	18,191,700		부채합계	0	
			순자산	18,191,700	

2009년 예산안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백분율	항목	금액	백분율
이월금	5,000	10.0%	인건비(2인)	24,000	48.0%
회비	24,000	48.0%	사무실유지비	12,000	24.0%
후원회비	20,000	40.0%	사업비	13,000	26.0%
기타수입	1,000	2.0%	기타 잡비	1,000	2.0%
계	50,000		계	50,000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창립선언문

오늘날 세계는 격랑과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모습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파괴를 심화시켰고 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체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정부나 각국의 정부들은 근본적인 대안을 열망하는 민중의 염원과는 반대로, 인간의 건강을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용하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건강은 개인의 선택이나 의료서비스 체계를 통해서만 접근될 수 없고 자본주의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시대는 기업세계화로 인해 건강 관련 사안이 일국가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좁은 의미에서의 보건의료문제를 넘어 사회보장제도속에서의 시장원리도입과 민영화, 의약품 접근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광우병과 GMO로 대표되는 식품안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국제적 신자유주의 협정, 기업감시와 노동안전과 노동조건의 문제, 여성·아동·성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들이 연관된 문제,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연대를 우리의 연구와 활동주제로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실천할 연구와 활동의 주체들도 보건의료인들만의 참여로부터 그 범위를 넓혀 다분야의 공동참여로 확대하면서 근본원리 역시 민주적 원칙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와 민영화라는 원리를 근간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조차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을 명목으로 의료보장제도를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긴다는 논리는 우리의 건강을 대형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같은 돈놀이 투기꾼들에게 넘기는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질병치료를 필요한 약이 존재하는데도 값이 너무 비싸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와 독점권을 더욱 강화하여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도가 강화,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무역의

‘장벽’으로 간주하는 자유무역협정이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국제협정의 도입추진은 이윤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탐욕추구대상을 좁은 의미의 보건의료제도에 한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건강의 파괴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발전한 21세기에도 노동자들은 생산현장에서 여전히 단순한 기계들의 부품처럼 취급받으며, 온갖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세계화 시대의 자유로운 교역은 오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을 뜻할 뿐, 노동은 더 많은 착취의 대상으로 천락하고 있다. 그 예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노동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자신의 건강을 모두 쓰고 버림당하는 폐기물처럼 대우받고 있다. 이주노동의 금지 역시 선언문에서나 존재할 뿐, 굶주린 아동들에게 오히려 최악의 임금과 살인적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이 보편화된 ‘기아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창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건강의 파괴는 생산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복리를 위해 활용되기보다 난자를 포함한 장기매매를 체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 없이 진행 되는 임상실험은 이 시대의 또다른 생체 실험이 되고 있다. 여성, 아동, 노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주변인과 소수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피해의 맨 앞줄에 서게 되었다. 이처럼 21세기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오히려 인간의 보편적인 복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거주환경마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파괴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이미 눈앞에서 시작되면서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눈앞의 이윤 때문에 각국정부와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추구를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화석에너지를 고갈시켜 지구가 파괴되는 현실에서 오히려 핵발전이 주된 대안으로 재포장되어 제시되고, 기후변화로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는데도 이런 현실이 인간과는 무관하다는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 거대 농축산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종자부터 그 유통까지를 공장형 축산이나 에너지 낭비형 곡물생산 더 나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종자와 동물의 생산으로 대치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크푸드의 대량생산과 유통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지구 한편에서는 수십억 명이 굶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십억 명이 비만으로 고통 받으며 암과 심장병, 신종 전염병 더 나아가 인간 광우병과 같은 신종 질병으로 죽음에 처하는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공언되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전쟁이 빈발하는 시기이다.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아래 전쟁은 지구 곳곳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고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오직 지역적 패권과 이윤을 위해 각축하는 각국정부와 그들을 지원하는 기업들일 뿐이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협에 취약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세계가 유일하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이러한 그들만의 세계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자본주의와 그 현대적 형태인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위기는 일부 땀질 처방만으로 변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 체제가 바로 문제라고 판단하며 다른 대안과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현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단지 보건의료제도 부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파헤치고 이에 대한 즉각적 대안 및 중장기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건강과 대안이라는 연구공동체를 출범시킨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숨겨진 문제들을 파헤치고 이에 대안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우리는 문제를 폭로하고 대안을 찾아가면서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사회제도에 저항할 것이고, 이 사회에서 피하기 힘든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려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쟁이 초래하는 인간의 생명파괴에 저항할 것이다. 기존 사회제도를 옹호하는 학문적 분야 구분에도 얽매이지 않고 분야별, 이슈별 구분에도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창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찾으려는 건강, 그리고 환경, 그리고 그 대안은 인간의 건강이, 그리고 인간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외에 다

른 대안이 없다는 도그마를 넘어서려 한다. 대안은 우리에게 열려있으며, 다른 세상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찾아내어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에게 '건강'과 다른 세계를 위한 '대안'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건강과 대안>은 이를 찾아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려 한다.

2008년 10월 18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